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위한 시민제안展

제3회 평화군축박람회 지금, 평화를 이야기 하자
Peacenow2012.tistory.com

실현가능한 꿈, 군축 / 국방예산삭감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 군비축소
평화의 섬 넘보지마 / 제주해군기지반대
평화를 위한 나눔 / 남북화해협력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핵발전반대
NO MORE! NO WAY! 무책임한 무기거래
우리는 파병을 반대한다 / 전쟁반대 파병반대

우리 삶의 진짜 위협은?

총 대신 밥, 우리 삶의 '진짜' 위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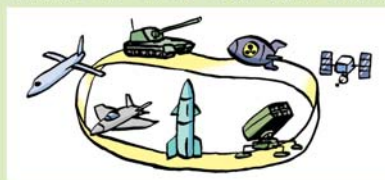
남한은 이미 20년 전에 북한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어, (1991-95년 국방중기계획) 1994년부터 2007년까지 남한은 총 1,978억 달러를, 북한은 215억 달러를 국방비에 사용했대, (SIPRI 연보 2008)



결국 6,70년대에 북한이 국방비를 많이 썼다해도 그 후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한은 신무기 도입을 못했기 때문에 육해공군 장비가 질적인 면에서는 남한이 북한을 앞서게 된거지, 그런데도 매년 국방비를 올리고 또 올려야 할까?



즉 남한이 더 많은 돈을 무기 사는데 쓸수록 북한은 더욱 더 위협을 느끼며 핵무기를 더 빨리 만들려고 할거야,



한 쪽이 더 많은 무기(재래식 무기)를 사면 다른 한 쪽도 더 센 한방(핵무기)을 개발하고, 그럴 한 쪽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무기(미사일방어무기)를 살 것이고, 그럴 다른 한 쪽은 더 센 한방을 개발하려고... 결국 군비경쟁은 끝이 없는 꼬리무스의 띠와 같아,



전쟁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정당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수조원의 돈을 무기 사는데 사용해야 할까?



막연한 위협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무기를 사고 군대를 강화하면,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더 많은 무기를 사고 군대를 강화하려 할 거야,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는 불신과 군비경쟁만 심화될거지,



국방비 vs 복지비

2013년 국방예산안 35.5조원... 매일 972억원씩 국방비로?

무기수입 세계2위, 국방비지출 세계12위, 교육비 23위, 사회복지비 33위

순위	무기수입 (%)	국방비 (억 달러)	교육비 (%)	사회복지비 (%)
1위	인도	미국 6,896	노르웨이 9.0	프랑스 28.4
2위	한국	중국 1,293	덴마크 7.7	스웨덴 27.3
3위	파키스탄	러시아 641	아이슬란드 7.6	오스트리아 26.4
4위	중국	프랑스 582	스웨덴 6.8	벨기에 26.3
5위	싱가포르	영국 579	벨기에 6.5	덴마크 26.1
6위	호주	일본 545	뉴질랜드 6.4	독일 25.2
7위	알제리	사우디아라비아 462	핀란드 6.1	이탈리아 24.9
8위	미국	인도 443	이스라엘 5.9	핀란드 24.8
9위	아랍에미리트	독일 435	아일랜드 5.7	헝가리 22.9
10위	그리스	이탈리아 319	에스토니아 5.7	포르투갈 22.5
11위		브라질 316	프랑스 5.6	스페인 21.6
12위		한국 283	오스트리아 5.5	그리스 21.3
13위		캐나다 231	네덜란드 5.5	노르웨이 20.8
14위		호주 230	미국 5.4	룩셈부르크 20.6
15위		터키 187	영국 5.4	영국 20.5
16위			스위스 5.4	슬로베니아 20.3
17위			슬로베니아 5.2	네덜란드 20.1
18위			폴란드 5.1	폴란드 19.8
19위			헝가리 5.1	체코 18.8
20위			멕시코 4.9	일본 18.7
21위			캐나다 4.9	스위스 18.5
22위			포르투갈 4.9	뉴질랜드 18.4
23위			한국 4.8	캐나다 16.9
24위			스페인 4.6	아일랜드 16.3
25위			이탈리아 4.6	미국 16.2
26위			칠레 4.6	호주 16
27위			독일 4.6	슬로바키아 15.7
28위			호주 4.2	이스라엘 15.5
29위			체코 4.1	아이슬란드 14.6
30위			슬로바키아 3.6	에스토니아 13
31위				칠레 10.6
32위				터키 10.5
33위				한국 7.6
34위				멕시코 7.2

2012년 군비 동결시

2.5조원 절약

2011년도 예산 날치기 통과 때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1.1조원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1.5조원
전면무상급식 초·중학생 548만명 1.9조원

2011~2015년 군비 동결시

16.6조원 예산절감

반값등록금 5.7조원 / 실업안전망, 생활안전망 553만명에게 제공

실현가능한 꿈 군축

국방비 줄일 수 있다

1980년대 냉전 이후
2000년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전까지
전세계 국방비 절반으로 급감

냉전의 두 축 러시아 92%, 미국 28% 군축

냉전의 최전방 국가 대만 20% 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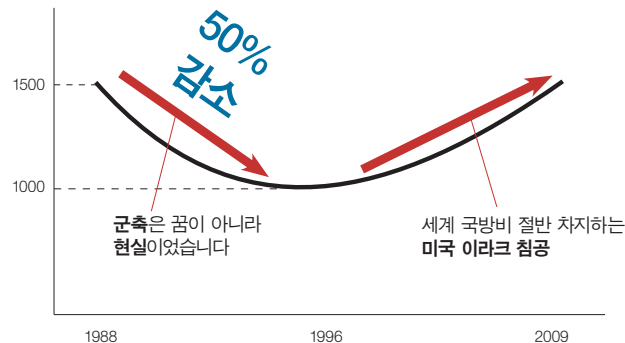
독일 36%, 영국 21%, 프랑스 13% 군축

2003년부터 이라크 침공으로 미국 국방비 급증
세계 국방비 절반은 미국이 차지

그럼에도 프랑스, 러시아, 독일은 국방비 감소
이라크 전쟁 동참한 영국조차 국방비는 그대로

세계 군비 지출 추세 1998-2009

* 단위 \$ (2008년 US\$ 기준) (출처) SIPRI Yearbook 2010



한국은 국방비 2배 급증!
군축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냉전 이후 주요국 국방비 감소 사례

* 단위 \$ (2010년 US\$ 불변가격 기준) (출처) SIPRI Database

	1990년	군비가 가장 최소일 때 1990~2011 중	1990년 대비 감소율
미국	510,998	366,918	-28%
영국	54,298	42,994	-21%
프랑스	65,774	57,426	-13%
독일	66,876	42,835	-36%
러시아	259,734	20,551	-92%
대만	9,803	7,824	-20%

주요국 국방비 변동폭 1990-2011

* 단위 \$ (2010년 US\$ 불변가격 기준) (출처) SIPRI Database

	1990	2009	변동폭	
미국	510,998	689,591	35%	급격히 증가
영국	54,298	57,875	7%	증가
프랑스	65,774	58,244	-11%	감소
독일	66,876	43,478	-35%	감소
러시아	259,734	64,123	-75%	급격히 감소
대만	9,803	8,888	-9%	감소
한국	13,881	28,280	103%	매우 급격히 증가

남북한 경제력 및 국방비 비교

(출처) CIA Factbook / 국방백서 2008, 2010 / SIPRI Yearbook 2003, 2008

구분		남한	북한	비교(배)
경제력	국내총생산 GDP(2009)	8,325억달러	278억달러	30
	국민총소득 GNI(2009)	8,372억달러	224억달러	37
국방비 투자	국방비1 남한 국방부 추산 (GDP3%유지)	250억달러 (GDP3%유지)	80억달러 (GNI30% 상회 추정)	3.1
	국방비2	139.3억달러	17.9억달러	7.8
	1994-2007 군사비 누계	1,978억달러	215억달러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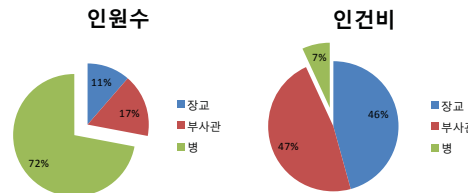
실현가능한 꿈 군축

군 인력 줄일 수 있다

“국방비 인건비 비중 과다,
장교증원 타당성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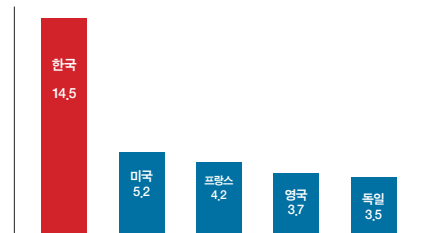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 점검분석 중에서

5년간 독일, 프랑스, 영국 수준으로 군간부 감축(50%)하면 9조3천억원 절감
사병 감축(30%)하면 2조원 절감 병력 감축만으로 매년 2.3조원 절감 효과



국방개혁=군축, 이제 우리도!
한국군 최소 26만, 최대 38만 적정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예외없이 군축
병력 감축 30% 이상, 국민 1천명당 군인수 한국의 4분의 1 수준



인구 1천명당 현역군인수 (출처) Encyclopedia of violence

〈적정군병력 연구〉
박재하 '이상적인 인력모집에 의한 남북한의 군축인력 규모 분석' 〈국방논집〉 (1991)
김충영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 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배비' 〈국방논집〉 (1992)
조동호 '통일의 경제적 비용과 편익'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1997)
이병근, 유승경 '한반도 군비감축의 경제적 효과' 〈LG경제연구원〉 (1998)
윤진표 '군비통제정책과 군사력 정비정책의 조화방안' 〈제8회 군비통제세미나〉 (1998)

총병력수

2012년 현재

63만 6천명

노무현정부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

이명박정부 2022년까지 52만
2천명으로 감축

30만명으로
감축 불가능한가?

군 간부수

2012년 현재

장교 7만2천
부사관 11만5천

노무현정부 2020년까지
장교/부사관 비율 40%
수준 증대. 장교 7만
부사관 13만5천명

이명박정부 2025년까지
장교/부사관 비율 40%
수준 유지. 장교 7만
부사관 15만2천명

장교 3만5천,
부사관 7만명으로
줄이면
안되는가?

실현가능한 꿈 군축

군복무기간

육군 21개월

▼
노무현정부, 2020년까지
18개월로 축소
이명박정부, 군복무기간
축소
계획 폐지

▼
12개월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가?

군 복무기간 줄일 수 있다

군복무기간 덴마크 최소 4개월
독일, 프랑스, 러시아도 1년 이하

〈출처〉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

주요 국가의 군복무기간 (개월)			
덴마크	4~12	그리스	12
오스트리아	6	러시아	12
스웨덴*	7.5	대만	12
스위스	8.7(최소 260일)	멕시코	12
브라질	9~12	이란	18
노르웨이	12	한국**	21
프랑스*	12	중국	24
독일*	12~24	이스라엘	36
프랑스*	12		

〈출처〉 CIA The World Factbook - 육해공군, 남녀 다를 경우 육군, 남자 기준으로 정리
* 모병제 / ** 국방개혁2020에 의거 18개월로 단축예정이었으나 현정부 21개월로 유지

착한 무기는 없다



이명박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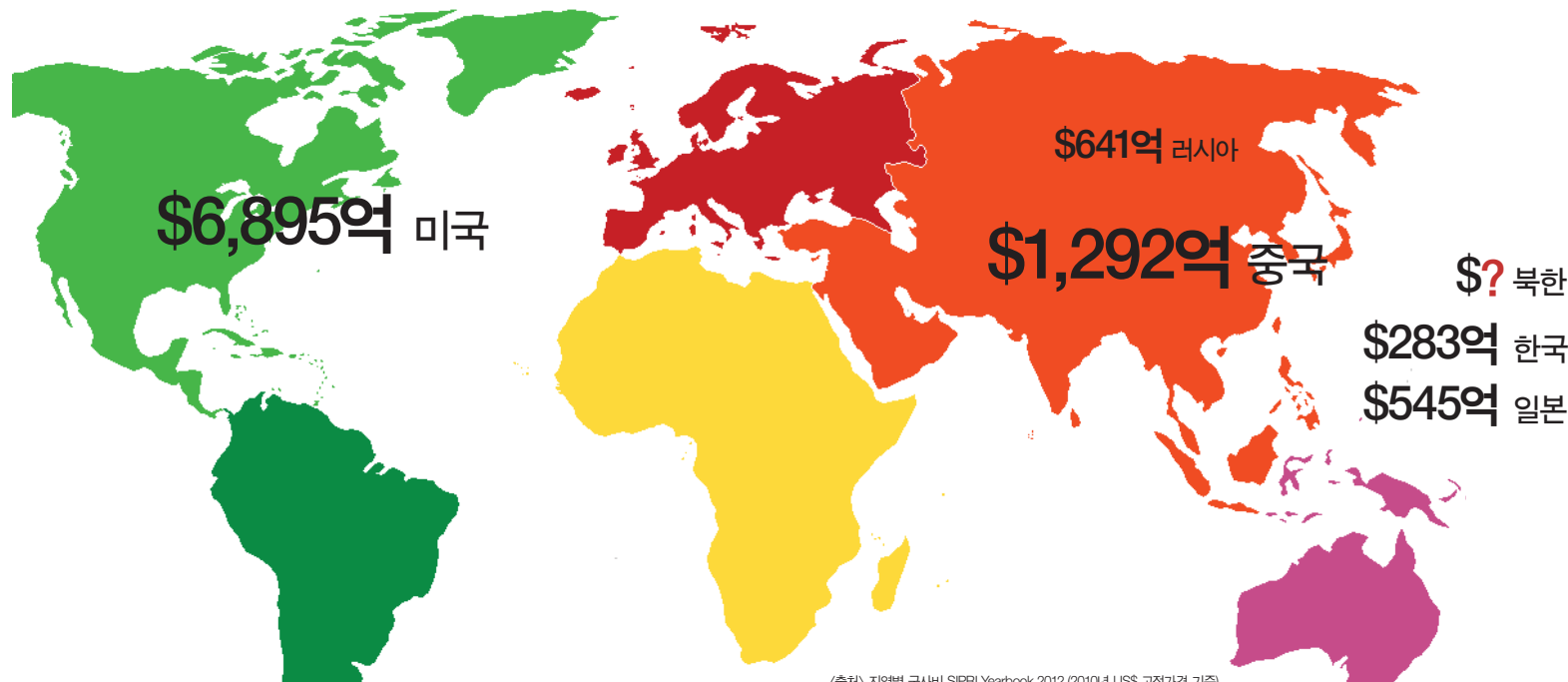
무기수입 세계 2위
무기수출 세계 15위
무기수출 세계 7위 목표...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일까?

MORE 군사비 무기 평화?

전세계 \$1조6,341억

아시아/오세아니아 \$3,297억 아프리카 \$322억
아메리카 \$7,802억 유럽 \$3,758억



〈출처〉 지역별 군사비 SIPRI Yearbook 2012 (2010년 US\$ 고정가격 기준)
〈출처〉 국가별 군사비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0년 US\$ 고정가격 기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군사비 증가 추세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비는 테러와의 전쟁 발발로 늘어나기 시작해 냉전 시기의 수준만큼 높아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군사비는 상당히 감축되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2011년 현재 전 세계의 군사비는 1조 6천억 달러나 됩니다.

2011년 전세계 군사비 1조 6천억 달러

1987-88년 냉전 시기 최고 수준 증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
전세계 인구 1인당 \$233 군사비 부담
2000년 대비 54% 증가

2011년 6자회담국 군사비 \$9,658억
세계군사비 59% 차지

LOWER 군사비 무기 갈등!

국방예산이 많을수록 시민들이 안전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면, 미국 시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요?

과도한 국방예산은 때때로 시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A국가의 군사비 증액은 B 국가의 군사비 증액을 불러오고, 결국 A국가는 더 많은 군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보딜레마라는 악순환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결코 안전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엄격한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줄일 수 있는 군사비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빈곤층 등 취약계층 지원, 보육, 등록금, 주거 문제 등의 해결에 군사비는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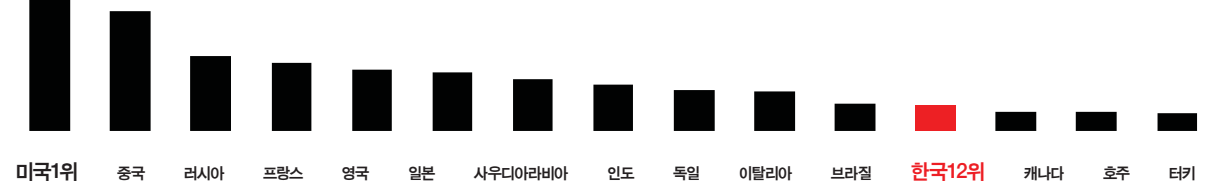
1년치 세계 군사비 = 유엔 700년치 예산 =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5번 달성

2009-2010 세계군사비 700억 달러 증가 = 2년치 세계 기아문제 해결(연간 300억 달러)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위해 필요한 추가재정, 2009년 세계 군사비 총합의 21%에 불과

인간 안보(human security)란 어린이가 죽지 않는 것, 질병이 퍼지지 않는 것, 일자리가 줄지 않는 것, 인종갈등이 폭력으로 변하지 않는 것, 소수자가 억압당하지 않는 것이다. 안보는 무기와 관련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엄성과 관련된 것이다.

- Pax Christi International, 2009



군사비 줄여 경제 살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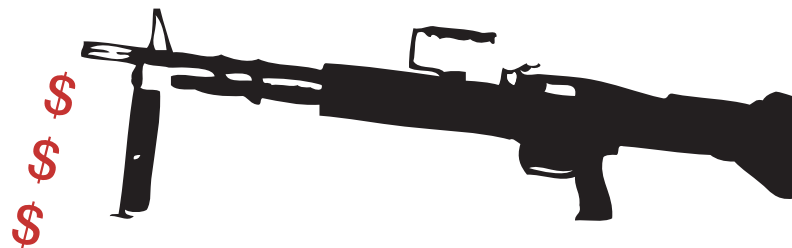
군사비의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아십니까?

군사주의의 총체적 비용에는 다른 모든 기회비용, 즉 그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경우의 비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소중한 재원이 다른 곳에 사용됐더라면 어땠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빈곤한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 그리고 수많은 다른 방식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미국 무기개발을 위한 R&D 800억 달러를 다른 분야 R&D에 투자했더라면?

- 군사부문 생산이 증가할수록 소비재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제에 돌아가는 물적, 인적 자원은 대신 감소
-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시절에도 핵무기, 생화학 무기 생산에 따른 산업폐기물과 사고에 의한 공기,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과 보건문제 발생
- 군부대 근처 HIV/AIDS 발생률 증가를 야기하는 매매춘, 폭력 증가하는 문제 발생
- 세계 도처에 군부정권 존재, 군의 문민통제 거부, 회피하는 문제



군사비 줄이고 경제도 살리고

2007년 후반 처음 시작된 경제위기는 여전히 전 세계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 미국, 그리스, 터키,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은 전체적인 정부지출 감축 차원에서 국방예산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비 삭감이 어떤 지점에서 세계 군사비에 있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양측 모두 군비 경쟁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 위기는 향후 몇 년 간 중미관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Friedberg, 2010

다만 현재의 군사비 흐름을 바꿀 기회의 창이 지금 열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해 군사비 삭감을 주장해야 합니다.

군사 부문 지출은 다른 부문들에 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습니다

군사비 10억 달러는 8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반해 이 돈이 청정에너지 부문에 쓰일 경우 122,200개, 보건부문에 14,000개, 교육부문에 20,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Pollen and Garrett-Peltier, 2009

세금을 무기 대신 빈곤해결에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MDG 달성 비용
3290억 원

전세계 군사비의
20%에 불과

*출처 〈Whose Priorities?〉 International Peace Bureau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1020억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72억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권리 향상
\$72억



유아 사망률 감소
\$100억



산모의 건강증진
\$100억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142억



지속가능한
생태만들기
\$155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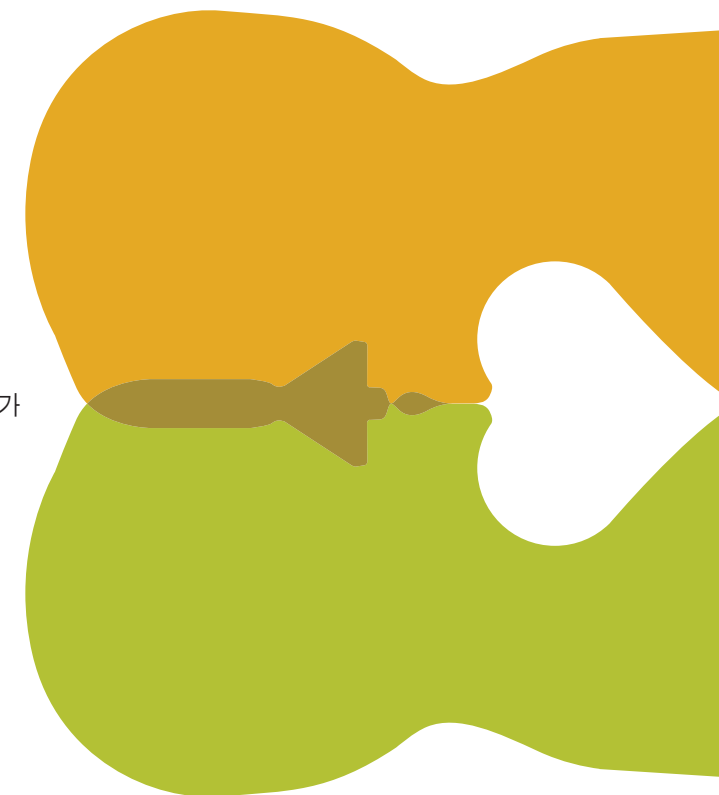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400억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일러스트 @박정진

맞다 아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있다 없다? 15만톤급 크루즈

이명박 정부의 말바꾸기

제주해군기지사업 결정 과정

노무현정부

- 2007년 5월 14일 : 제주도지사 유치결정 발표
- 2007년 6월 8일 : 제주해군기지 건설지역 결정통보
- 2007년 6월 22일 : 노무현 전 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2007년 12월 28일 : 제주해군기지사업 관련 국회 부대의견 제시, 부대조건 이행 조건으로 2008년도 예산 174억원 통과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이명박정부

- 2008년 9월 11일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식 명칭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확정
- 2009년 4월 27일 : 기본협약서(MOU) 체결, 최대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항구 건설 내용 포함
- 2011년 4월 29일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의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발전사업 정부지원 근거 규정 마련
- 2011년 7월 25일 :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 고시(국토해양부), 강정지역을 대형 크루즈 기항 거점으로 육성
- 2011년 4월 28일 국회 야5당 해군기지사업 진상조사단 구성
- 2011년 8월 4일 국회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개최,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민항 위주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라는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으로 인해 일시 중단하고 재검토 요구
- 2011년 10월 21일 국회 예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구 구성 권고,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



〈사진〉 해군기지사업단 앞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말 바꾼 이명박 정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15만톤급 크루즈 입항도 없다!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 상정하기 어렵다”

2012년 2월 21일 김항식 국무총리, 페이스북에서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조원에 가까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예산 중 '관광미항' 을 위한 예산은 530억원에 불과함. 터미널 1개, 진입도로 1식, 토지보상 등이 전부임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무시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위원장 전준수 서강대 교수) 해군의 설계로는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어렵다”고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 표명 및 정부 관계부처간 긴급 비공개 회의 개최, 2월 29일 국무총리실,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종합입장 발표하고 기지공사 강행하고 있음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사업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 입지선정부터 정당성 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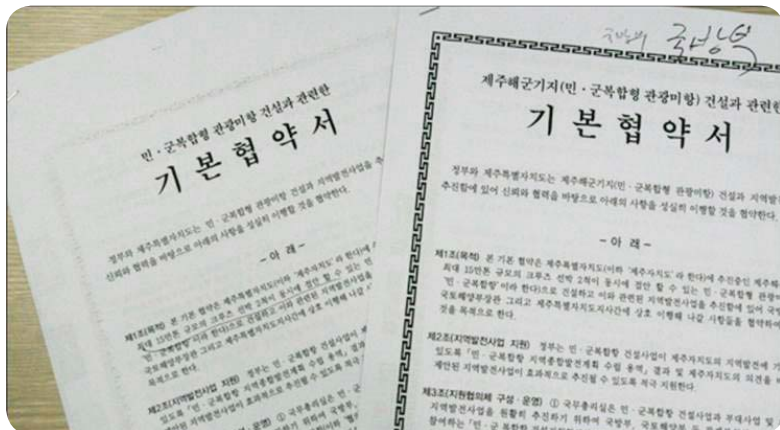
- 2007년 4월 마을인구 1,900명 중 불과 87명 참석.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 5월 제주도지사,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725명 참가, 94% 반대)는 불인정

한나라당 주도 도의회, 절대보전지역해제 날치기 통과

- 2009.12 강정해안 환경여건 변화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이유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 3. 15 제주도의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기본협약서(MOU) 이중 체결, 국회부대 조건 불이행

-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2009년 4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명칭이 서로 다른 2종류의 문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서명



입지타당성 미 실시

- 해군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동, 금빛나팔돌산호, 나팔고동 등에 대한 현황조사, 이를 감안한 입지적정성 검토 하지 않음

⇒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의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문화재 발굴 불구, 위법적으로 부분공사 승인 및 시행

- 강정포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주혈 등 확인
- 중덕삼거리와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주변지역에서 청동기·초기 철기시대로 추정되는 유구 확인
- 문화재청도 문화재지표조사에서 유적 발견 가능성 예견
- 전체 발굴조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문화재청의 부분공사 승인은 위법행위
- 해군은 문화재 전문가 입회 없이 펜스 설치하고 구럼비 바위 발파 강행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즉시 중지했어야 함



생명의 섬 파괴하는 군사기지

강정마을 법정 보호종 서식 현황

연산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연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자색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밤수지맨드라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둔한진총산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별혹산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금빛나팔돌산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해송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환경부/ 적멸종위기종 2급/천연기념물 456호, 문화재청
긴가지해송	천연기념물 457호, 문화재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

동·식물

가수갈고동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붉은발말뚝게	멸종위기종 2급, 환경부
충충고랭이	희귀종, 법정 보호종은 아님
동남참게	희귀종, 법정 보호종은 아님
맹꽁이	멸종위기종 2급

제주해군기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대표적 보호종

붉은발말뚝게(멸종위기종 2급), 맹꽁이(멸종위기종 2급), 새뱅이(멸종위기종 후보종), 남방큰돌고래(IUCN Red List)

〈사진〉 위부터

1. 2012년 6월 12일 오탁방지막 훼손 사진
2. 2012년 6월 11일 이중오탁방지막 없이 준설 하는 사진
3.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폴파이프(fall pipe)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사진

해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수차례 위반

-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에서 해상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협의내용 위반
- 지하수 관정 드러난 채 공사강행, 원상복구 협의내용 위반
- 붉은발말뚝게 이식 허가조건 위반, 형식적인 보존조치



절차적 위법행위 관련 행정소송 : 환경권은 뒷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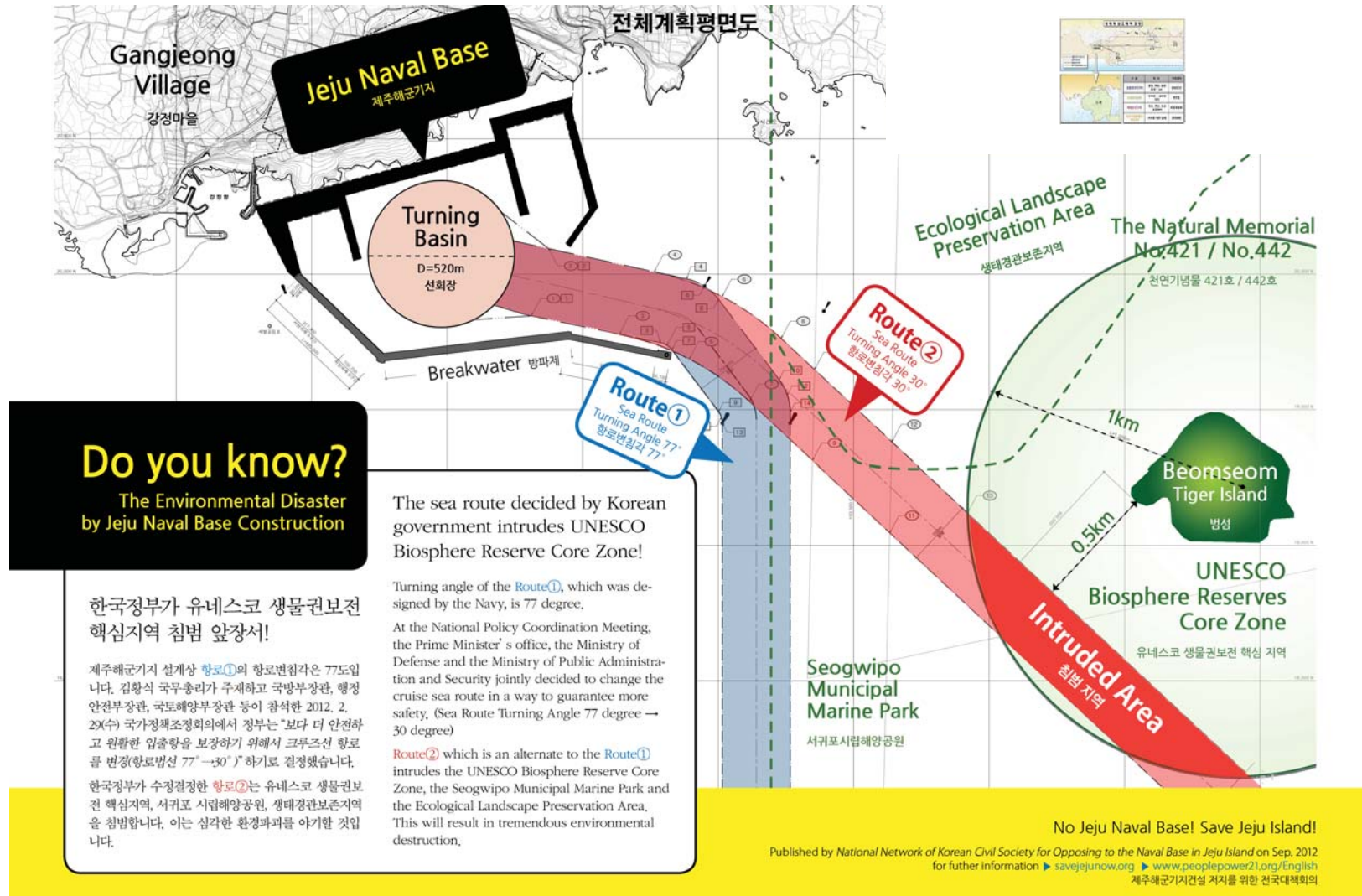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 **쟁점** :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대법 기각**(2012. 7. 2) : 대법은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
- **반론** :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취지, 환경권 및 생태계에 관한 인식 부족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2012. 7. 2)

- **쟁점**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의 전제가 되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위법함이 존재하는가?
- **대법 기각**(2012. 7. 2) :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구름비 바위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구역 지정을 해제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도 경미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 **반론** : 대법원은 절대보전지역이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것의 해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룰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그러나 절대보전지역이 환경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환경권 및 절대보전지역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임.

제주해군기지 이용 선박 항로, 범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침범



해군측 공권력 남용 및 인권침해

인신구속 주요사례

- 강정마을 지역에서 총 발부된 체포영장 10명, 총 신청한 구속영장 31명, 기소의견 총 372명 송치 (2010~2012/07)
- 해군, 강동군 강정마을회장 외 76명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1/07/06)
- 제주법원, 업무방해 등 혐의로 24일 체포된 강동군 강정마을회장 등 3명 구속 영장 발부(2011/08/26)
- 강정마을에 약 600여명의 경찰, 제주군사기지법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신부 등 35명 이상 연행(2011/09/02)
- 미사 중 업무방해죄로 문정현 신부 등 종교인 3명 연행 후 석방(2011/09/30)
- 서귀포경찰,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재물손괴 등 혐의로 대학생 11명, 한진중공업 노동자 4명 불구속 입건 후 석방(2011/10/03)
- 서귀포경찰, 특수손괴 혐의로 외국인 활동가 2명 구속영장 신청, 한 명 강제 추방, 한 명 출국 명령 (2012/03/14)
- PVC 파이프를 인간띠를 만들고 해군기지 공사차량 막던 신부, 평화활동가 14명 연행, 경찰 PVC 파이프 ‘에어톱’ 으로 절단(2012/04/16)

경제적 압박

- 주민, 활동가 14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 삼상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2억 8,978억원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주요 사례

- 강정 앞바다에서 물속에서 주먹과 무릎 등으로 활동가 송강호에게 폭력행사
- 아무 이유 없이 1시간 넘게 강정교 가운데 강정주민 50명 고착, 이동의 자유 제한
- 물지마 체포에 의한 직권 남용, 폭언, 미란다고지 위반, 불법채증, 성희롱 등
- 강정마을 방문하려던 해외 활동가 25명 입국 거부 (2012/09/10 현재)

용역에 의한 인권유린 주요 사례

-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지키는 용역들 문규현 신부 뺨과 다리 등을 가격
- 폭행과 폭언, 성희롱, 불법채증 등
-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온 종교인, 시민, 평화활동가들을 폭행하고, 체포한다며 신체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사법권 행사

평화권이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원리와 규범에 근거하는 정당한 권리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권리이며, 타국에 의하여 전쟁위험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대국제적인 방어권

국가는 모든 시민의 평화와 존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민은 국가의 국제평화 저해 행위 또는 침략적 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며 저항할 권리와 의무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군과 함께 이용할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경쟁에 빠져들 것

전쟁발발의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해군기지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노엄 촘스키, 강정을 말하다!

"해군기지 반대투쟁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보여준 지속적인 저항과 용기, 고결한 투쟁에 찬사를 보낸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보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들의 투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군사기지, 경제 살릴 것이다?

군사기지가 경제 살린다면 철원이 제1도시가 됐었어야

"제주도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 들어서면 장병소비와 일자리 창출, 관광객 방문 등 부대 운영에 따른 경제효과가 연간 900여 억 원에 달하고, 항만공사와 군 아파트 건설 공사에 의한 지역업체의 이득 또한 3800여억 원이 예상되는 등 막대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해군 측 주장

- **군인의 신규 소비?** 통상 영내 PX나 복지시설 이용하는데 얼마나 지역상권 매출 증대할 지 의문
- **인구증가?** 해군기지 들어선 동해시 송정동, 진해시 중앙동 해군기지 건설 이후 오히려 인구 대폭 감소해 상권이 위축됐음. 상점의 6~70% 폐점상태로 전락
- **일자리 창출?** 동해시 제1함대 25명, 평택시 제2함대 39명, 부산시 제3함대 26명, 진해 해군기지 65명 고용창출. 그나마 대부분 군항 환경미화 등 잡역
- **관광수익?** 제주방문 관광객 중 해군 보러가는 관광객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오히려 군시설이 인근 중문 관광단지와 서귀포시 중심지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오히려 제주해군기지는 중국 관광객을 감소시켜 관광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더 커보임

"한국이 제주도의 자연생태와 인문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주도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섬을 군사화해 이웃국가에 총과 칼을 겨누고 있다" 며 "중국관광객들이 제주도 관광을 거부해야 한다."

중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라오닝성 사회과학원 변경연구소 휘차오(呂超) 소장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매년 40만명에 이르고, 제주도는 오는 2014년까지 중국인 관광객수를 100만명까지 늘릴 계획 (출처) [정책토론회] 동북아 해양갈등과 평화적 생존권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2011/10/05)

국방부, 미국 항모 전투전단 입항시 경제파급효과 기대

"美항모 전투전단 입항시 경제파급효과"에 따르면, 미 항모 1회 입항시 60억원의 소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 2011년 8월 31일에 열린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에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 중

- 미 항모가 1회 입항시 인원수 6,000여명
- 미 항모 정박일수 3일
- 미 승조원 1인당 소비액 약 300달러(1일)
- 1달러 환전금액 1,100원
- 6,000명X300달러X3일X1,100원=약 60억원

어떤 용도의 소비인지 밝히지 않은 채 미군이 하루에 300 달러씩 소비할 것이라는 점을 경제적 효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군사적,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임

국방부가 미 항모의 입항을 전제로 하여, 미군의 하루 300 달러 소비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함. 해군은 미 항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 가능성이 없으며, 만약의 경우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짓 주장을 펴왔음



제주해군기지, 지역경제 발전시킬 것이다?

지키지 못할 제주지역 발전계획 남발하는 정부

2011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 우선추진사업 15건의 사업예산 중 첨단 화훼·과수단지 조성(200억원),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건립(22억원),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200억원) 등 3건의 422억원 국회 예결위원회 반영

제주해군기지사업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주변지역 발전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2012년 예산 심의에서 422억원 대부분이 삭감

2012년 2월 1조 771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계획을 확정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국비 5,787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관련 예산 대부분이 국회에서 삭감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계획이 실현가능할지 의문

제주해군기지사업 중단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

가능성 낮은 15만톤 크루즈 입항 가능성을 전제로 경제파급효과 주장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은 세계6~7척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 2척이 동시에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 김항식 국무총리

- 정부와 해군이 그 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한 것은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
- 그러나 실제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2008년)의 경제적 분석은 2011년~2044년간 제주에 기항할 크루즈선박 총수를 497척으로 예측하여 분석함. 35년(420개월) 동안 매달 크루즈 1척 정도만 제주를 기항한다는 것을 의미함.
- 즉 강정에 조성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크루즈 수는 한 달에 한 척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 더욱이 김항식 총리는 최근 전세계 15만톤 크루즈가 6~7척에 불과해서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입항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음.
- 이는 15만톤 크루즈를 포함해 크루즈 선박의 제주해군기지 활용을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구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게 함.
- 한편, 민간 크루즈 사업은 이웃한 화순항과 서귀포항의 유사사업으로 인해 사업적 타당성을 갖기 어려움. 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을 갖기 힘든 크루즈 항만시설은 도리어 핵항공모함과 같은 초대형 미군 함정이 전용하여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동기를 제공할 우려가 큼.



(사진) 김항식 국무총리 서필면지

< 제주 민군복합형 건설 논란의 양면기 >
 2011년 6월 15일 중앙정부의 제주도가 합의하여 시작한 민군복합형 건설에 관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본토는 평화수호의 자연환경보존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데, 제주도가 남방해역과 해상공용에 대한 감시나 보호를 위해 기지건설이 가장 적합한 곳이고, 환경 및 문화재 보전에 관련된 적정선 정리를 위한 이상, 그 주장은 화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제기는, 해군기지와 함께 건설하기로 한 관광코루진 부지에 관한 감시에 관한 약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 동시 입항이라는 주장을 강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은 세계에 6, 7척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급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국내선박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앞의 주장이 틀렸을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이루어진 기술검토위원회 보고를 참고하여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환경과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의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미군주둔과 전혀 상관없다①

미군, 제주해군기지 사용에 한국 승인 필요?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미국정부로부터 단 \$1도 받지 않았으니까?

- 해군 부산기지건설에도 미국정부 돈은 없었음. 그러나 부산기지에 미군함, 심지어 핵항공모함까지 수시로 입항하고 있음
-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 유도미사일 순양함 카우펜스함, 유도 미사일 구축함 머스틴함, 웨인 마이어함 등 4척으로 편성, 승무원과 병사 7000여명에 이르는 항모강습단 입항(2011/09/29)
-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 부산기지에 입항(2011/04/30)
- 핵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 참가 목적 부산기지에 입항(2009/03/11)

미군, 제주해군기지 사용에 한국 승인 필요?

-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 어디든 맘대로 주둔할 수 있으며, 미국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통고' 없이 대한민국의 비행장이나 항구를 이용할 수 있음.
- 한미상호방위조약 :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제4조)
-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제10조.1)
-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 간을 이동할 수 있다"(제10조.2)
- 합의의사록 제10조 3항 :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미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에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미군, 오키나와가 있으니 제주해군기지까지 올 필요 없다?

- 오키나와에는 대부분 공군기지와 해병대 기지, 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의 해군기지는 부족. 오키나와 서남부에 위치한 나하(那覇)항에는 3,000톤 이상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없고 이마저도 미국은 2005년 10월 미군 재배치 합의에 따라 일본에게 반환 예정. 오키나와에는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이지스함도 정박시키기 어려움.

미국, 해양패권 유지 비용 동맹국에게 전가

- 냉전 시기 전세계 600척의 해군 함정을 운영하다가 2005년에 와서는 300여척의 해군함정만을 유지할 수 있게 됨.
- 특히 경제위기로 미 국방비 삭감되면서 동맹국에게 패권 유지 비용 전가는 더욱 심해질 것임.
- "앞으로 미군은 아시아에서 기항지를 늘리고 다수 국가와의 다국적 훈련도 확대할 것"(2011/06/11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

제주해군기지는 미군기지는
아니더라도 다만 미국과
그 하위파트너로서
해양전략을 공유하는
한국해군의 기동전단의
전초기지이자 미국해군의
기항지로 이용될 것



미군주둔과 전혀 상관없다②

미국 요구대로 설계된 제주해군기지

① "CNFK(주한미해군사령관(Commander, U.S. Naval Forces Korea)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 <설계적용>

제3편 기본설계 검토

1 부두 계획수심

설계기준 고려	정합식 적용
① 만재흘수 D=11.5m ② 항내파랑의 영향=1.0m ③ 대기압 영향=0.5m ∴ 부두 계획수심 = 11.5+1.0+0.5=13.0m 이상	•Swell 등을 고려하여 만재흘수의 15% 고려(PORT DESIGN, p52) •부두 계획수심 = D×1.15 = 14.95m 이상

설계적용 •CNFK 요구조건(DL(-)15.20m)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

2 선석길이 검토

항공모함	대형 크루즈선	구간별 선석길이
		•1.20L 기준 - 345.0 × 1.20 = 414.00m (크루즈) - 342.3 × 1.20 = 410.76m (항공모함) •선석길이 420m 이상으로 필요 조건 만족

② 핵추진항공모함 CVN급 기준으로 설계

3.2.2 부두이용조건

- 서방파제 및 남방파제(A구간) 항내측을 대형크루즈선의 접안시설 계획.
- 대형함(KDX급) 임시계류부두 계획.

구 분		크루즈선	항공모함 (CVN급)	대형함 (KDX급)	항안경비정 (YUB급)	
		150,000GT	80,000GT			
대 상 선 박	선 장	345.0m	300.0m	342.3m	165.9m	21.3m
	선포	41.0m	33.0m	40.5m	21.4m	5.4m
	만재흘수	10.0m	10.5m	11.5m	6.25m	1.6m
	선석수심	12.0m	11.5m	15.2m	11.5m	2.0m
	선석연장	420.0m	360.0m	420.0m	200.0m	30.0m
전 연 력		150t/EA	100t/EA	100t/EA	70t/EA	5t/EA
접안조건	접안속도	0.12m/sec	0.15m/sec	0.13m/sec	0.15m/sec	0.38m/sec
	접안에너지	60.48t·m	40.12t·m	45.87t·m	22.59t·m	0.22t·m

크루즈선(150,000GT급)

항공모함(CVN급)

대형함(KDX급)

③ 크루즈함이 아닌 항공모함 기준으로 설계 (기준 8-3)

<선회장 적용기준>

기준	조건	선회장 소요직경		
		대형선(KDX-III)	중형선(PCC)	항공모함(CVA)
자력에 의한 회두	3L	480m	270m	
예인선에 의한 회두	2L			
지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인선을 이용하는 경우	1.5L			520m



④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II)(1공구)』, 제5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제5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1.2 과업의 내용 및 범위

• 본 과업에서 수행된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표 1.2.1>과 같음.
<표 1.2.1>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과업 내용	세부 내용
대상 지역	• 제주 해군기지 해역 및 그 접근항로 일원
대상 선박	• 15만 GT급 여객선 및 CVN 65급 항공모함
연구 내용	• 선회장 용역자료 조사 및 분석 • 전문가(한국도선사협회 부산지회) 자문 • 대상 해역 (대상 부두 및 항로) 모델링 • 대상 선박 자료 조사 및 모델링 • 대상 해역 항행환경 모델링 • 항행 환경이 선박 운항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실험 방법	• 실시간(Real Time)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및 분석

⑤ "항공모함 접안시 시설물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이격거리 필요"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을 Flight Deck(비행갑판)이 매우 크게 돌출되어 있으므로 부두와의 적절한 이격거리가 필요함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

5.1.2 계류바지

1 개요

• 항공모함 접안시 안벽 및 Apron 상 시설물과의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이격거리 필요
• 항공모함 계류시 및 필상시 소행함정 계류용으로 이용
• 이용조건, 안정성, 제작 및 보수가 용이한 강재 계류바지 적용

2 항공모함 접안방법

•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Flight Deck가 매우 크게 돌출되어 있으므로 부두와의 적절한 이격거리가 필요함
• 항공모함은 Tug선을 이용한 평행접안을 하며 계류바지를 통하여 접안하는 것이 일반적임

항공모함-접안전경 항공모함-남방파제 접안모식도

제주해군기지 꼭 필요한가①

남방 해양수송로 안전 보장?

말라카해협 해양수송로 위험은 지난 이야기

- 동북아 해역에서 해적/해상테러는 통항안전과 관련된 주된 쟁점이라 할 수 없음
- 말라카 해협에서는 해적 사건에 한해서만 극히 적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었고 이마저도 각국이 해경 간 협력을 강화한 최근 거의 사라졌음
- 말라카 해협 인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어로행위임.

해양수송로 군대가 지키겠다? 위험천만

- 일반적으로 민간상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나 민간상선을 군함으로 호위하는 것 모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발상



해양수송로 군대가 지키겠다? 위험천만!

- 국제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군사행동은 국제법 위반, 주권침해행위, 항행의 자유 침해, 무해 통항권(다른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해하지 않는 경우 통과할 권리) 침해
- 일반적으로 민간상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나, 군함으로 호위하는 것 모두 막연하고 비현실적 발상

해양수송로 보호, 군대가 아니라 해양경찰의 임무

- 해양수송로 안전을 지키고 해적 등의 위협으로부터 민간선박의 항행을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 정부간, 해안경비대간 협력체계는 이미 존재
- 해양경비대간 협력 사안 : HACGA(Heads of Asian Coast Guard Agencies Meeting) ⇒ 한국 해경 참여
- 외교적 협력 약속한 다자간 협정 존재 : ReCAAP(Regional Cooperation Agreement on Combating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 한국 국토해양부 참여

ReCAAP 부국장 Lee Yin Mui 해양사고 감소 위한 권고사항

- 각 정부에게 순찰, 감시 활동 강화와 협력 개발을!
- 선주와 선원에게는 항상 안전의식을 가지고 사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보고할 것
- 선주에게는 포괄적인 안전 계획 유지 등 ⇒ 권고 중에 군의 역할을 언급한 부분은 없었음

〈출처〉 Piracy and Sea Robbery Conference 2011 (2011/04/14)

제주해군기지 꼭 필요한가②

중일 해양갈등대비?

중/일과의 해양 갈등 대비?

- 해군력이 강력한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해양자원과 EEZ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역시 해군력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
- 한국은 일본의 해양위협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적극 협력하는 관계임. 이미 한국 해군은 일본과 더불어 미국 주도의 해군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고, 한미일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고, 한일군사협정 체결도 시도한 바 있음.
- 해양갈등 대비론의 본질은 사실상 한국 해군이 한미일의 해군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해상활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자주국방의 측면보다는 도리어 미중패권경쟁에서 미국측에 배타적으로 편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위험한 주장임.
- 실제로 중국은 최근, 특히 2010년 이후 서해와 동해에 기항한 미국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음.

갈등해역 신속전개?

- 해군력의 전진배치의 필요성은 과장된 것임. 한국이 소유한 이지스함의 탐지거리나 이지스함 탑재 유도무기는 수백Km를 사정거리로 두고 있음
- 더구나 항공모함을 보유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해군 역시 대형수송함 등 보급용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원거리 항해가 가능함(이른바 Sea basing 기능이 가능)
- 설사 만에 하나 영토분쟁이나 해양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성격상 정부간 외교갈등과 해경간의 갈등이 충분히 고조된 이후에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기지의 전진배치가 군사적 우위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도리어 중국 본토에 인접한 제주도에 미군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략해군기지가 건설될 경우 중국의 탄도미사일 혹은 유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제주도 전체를 공군부대, 특수부대, 병참부대로 요새화하지 않을 수 없음

〈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이슈리포트(2011. 9)



제주해군기지 꼭 필요한가③

대양해군론과 미국해양전략

북한위협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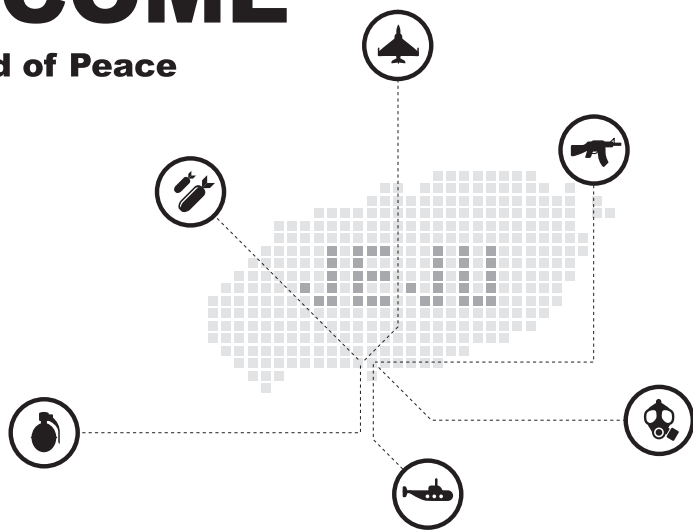
- 제주도 해군기지에 주둔하게 될 이지스함이 중단거리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방어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작계 5029 혹은 5015),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을지가디언프리덤 훈련, 코브라 골드 훈련 등 연합훈련 등 작전계획과 군사훈련들은 미해군의 바다로부터의 전략 즉 해상타격과 해상기지화 개념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구현 사례
- 북한비상사태대비계획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힘든 공격적인 요소(점령)를 포함하고 있음 이 계획이 방어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이 계획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남북간 군사갈등은 물론 지속되는 역내 군사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

대양해군=자주국방?

- 미군사력 감축에 대비해 자주국방 차원에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제주해군기지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자주국방보다는 미군전력에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미군이 해외 미해군기지를 더 건설하지 않고 동맹국에 더 많은 기항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것임.
- 실제로 미국은 세계금융위기와 재정적자, 테러와의 전쟁 등 복합적인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군사력-특히 주력인 해군력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
- 제주해군기지에 미 해군의 기항만 보장된다면, 미해군은 해양기지화, 해양방어 개념에 따라 제주도 서남방 해양에서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이지스함을 동원하여 중국/북한을 바다로부터 (From the sea) 봉쇄하고, MD 시스템도 운용할 수 있음.

WELCOME

to the Island of Peace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 결과적으로 한국 해군이 표방하는 '해양안보' 론은 미국의 해양패권전략과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양에서의 안전과 협력을 확대하기보다 미국과 다른 역내 국가들간 제해권을 둘러싼 갈등을 유발하고 해양의 군사화를 촉진시킬 위험하고 허구적인 담론
- 결론적으로 동북아 상황은 바뀌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지닌 지정학적인 위험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음.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재검토되어야

〈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해양전략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위험성」 이슈리포트(2011. 9)

“실용주의 정부 만들고 실천하는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비핵·개방·3000이란?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한다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불 달성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5.24 조치?

·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5월 24일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 발표

내용

-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 방북 불허
-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부터 “남북관계는 이념이 아닌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고 강조
-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의 전면에 내걸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북핵문제에 연계시킴
- 2007년 대선 때 구호로 쓴 비핵·개방·3000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실제 대북정책으로 추진
-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난 이후 5대 교류협력을 중단하는 5.24 조치 발표함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남북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크게 위축됨
- 이산가족 상봉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인도적 지원 역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북의 핵 폐기가 먼저다

비핵·개방·3000

비핵·개방·3000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한다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불 달성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북한이 핵 폐기 진전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재건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5대 분야(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에 걸친 '포괄적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비핵·개방·3000'은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 구상의 근간이 되었음.

북핵 문제의 난항, 천안함 침몰사건 및 연평도 교전, 광명성 발사실험 등으로 '비핵개방3000'의 구체적인 정책은 실현되지 않음.

한반도 신 평화구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 북한 핵포기 결심하면 경제발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현
-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위한 남북고위급회의의 설치
-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대북 5대 프로젝트 추진
- 남북 간 재래식 무기 감축문제 논의 시작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일괄타결방안)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제시한 구상임
- 6자회담 통한 북핵 프로그램 핵심 부분 폐기와 동시에 북한 안전보장 및 국제 지원 본격화
-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간의 협의 통해 구체적인 행동 방안 마련
- 북핵 프로그램 핵심부분의 폐기에 대한 구체적 요소 5개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



일러스트 - 안소라 (sora0429@daum.net)

“나^{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5.24조치

천안함 사건 한 눈에 보기

- 3.26 천안함 침몰
- 4.07 천안함 생존자 기자회견
- 4.15 천안함 함미 인양
- 4.24 천안함 함수 인양
- 4.25 합조단 비접촉식 외부폭발 발표
- 5.03 감사원 천안함 감사 착수
- 5.20 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5.24 이명박 대통령 단호한 대북 대응조치 발표
- 5.26 시민사회, 종교, 정당 대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국회의’ 개최
- 6.04 정부 천안함 사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 발송
- 6.10 천안함 감사 결과 발표
- 6.11 참여연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 발송
- 7.0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 9.13 정부 천안함 최종 보고서 발표

천안함 비공개 정보 목록

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사항	공개여부	비공개사유 및 공개내용
1	TOD 일체	사고 당일 백령도에서 촬영된 TOD 일체	비공개	군사기밀
2	항적기록	조타사일지, KNTDS, 항적별 수심층 기록 사본 혹은 평문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3	교신기록	해군 해경 등 교신기록, 이에 대해 군지휘부 대통령에 보고된 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4	구조인양기록	사건당일 구조, 인양, 경계, 추격을 위해 내렸던 지시사항 관련 보고서	비공개	군사기밀
5	수리정비기록	2008년 이후 천안함 정비일지	비공개	군사기밀
6	故 한주호 준위작업 기록	故 한주호 준위 사망 당시 임무, 위치, 이후 조치 내역	부분공개	
7	북한어뢰자료	북한산 무기소개책자 혹은 CHT-02D 어뢰 설계도	비공개	군사기밀
8	북잠수정자료	연어급 잠수정 의 제원, 성능, 무장 관련 자료	비공개	군사기밀
9	절단면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비공개	군사기밀
10	폭발흔적 분석자료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공개여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의 요약
11	조사단구성	합조단, 해외조사단의 명단, 구성, 임무, 각 조사팀 보고서 목록	부분공개	
12	당일함정 배치상황	사고 발생시 천안함 기준 50km 이내에 있던 함미 함정	부분공개	고속정 5척(대청도 인근) 및 초계함 1척(천안함 남쪽 약 49km), 미 함정은 0척

참여연대.민변 정보공개청구 및 국방부 공개 현황(2010.6.23 현재)

5.24 조치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5월 24일 5대 남북교류협력 중단조치 발표(2010년 5월 24일)

내용

〈출처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1. 북한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2.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3. 방북 불허
4.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5.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사업 보류

영향

-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피해와 손실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경협 종사 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나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음.
- 5.24조치 직후 경제협력 업체들의 피해액은 2011년 업체당 평균 19.4억원. 이는 지난 2010년 5.24조치 직후 조사된 피해액 평균 9.7억원 보다 두 배 늘어난 액수임.
- 대북사업 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피해회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6곳 ‘회복 상당히 어렵다’.
- 피해 유형 : 주문감소(33.2%), 투자비 손실(21.2%), 생산원가 상승(16.8%), 이자비용 증가(16.8%), 신용등급 하락(7.2%), 기타(4.8)
-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북중 경협으로 대체되는 중. 2011년 북중 교역액은 56억 달러, 2010년 북중교역액은 34억 6,600만 달러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기업의 경영실태와 정책과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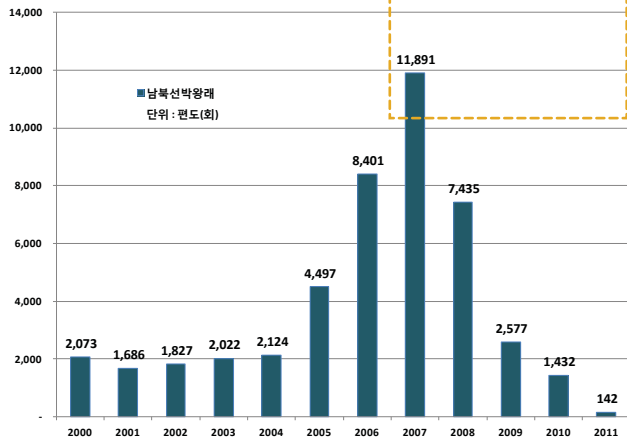
〈출처〉 김동철 의원실 ‘상임위 정책자료집3-이명박 정부 3년 6개월, 대북정책 실패와 정책전환 과제’

5.24조치 그 후①

신음하는 남북경협기업들

-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교역 증가세는 이전 정부에 비해 현저히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 기록함. 출범 1년차였던 2008년 남북 교역액은 18억 2천만 달러로 2007년에 비해 1.2% 증가, 2009년은 16억 7,900만 달러로 2008년 대비 7.8% 감소함.
- 2010년에는 개성공단 생산량의 증가에 기인, 전체적으로 13.9%의 성장세 나타냈으나, 실제 일반교역과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위탁가공교역은 급격한 감소세 나타냄. 5.24조치 이후에는 개성공단 제외한 기타 지역과의 대북교역은 일체 중단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3년 간 남한의 직접적 경제손실은 45억 8,734만 달러임. 북한의 38배(한국 9,287억 달러, 북한 247억 달러) 경제규모를 가진 남한의 피해가 더 큼. 북한의 직접적인 손실은 8억 8,384만 달러로 남한의 19.3%.
- 남한의 일자리 감소효과는 8만 7천여명

남북선박왕래(2000~2011)



98년부터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던 선박왕래는 01년~04년의 침체기를 지나 05년부터 급성장. 대북 강경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 이후 급락하여 현재는 94년대 수준으로 돌아감.

표로 보는 남북한 경제적 손실

2008~2010 단위 : 만 달러, 만명

남한

구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생산 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 유발
관광사업	금강산관광	75,350	147,878	54,322	20,326
	개성 관광	2,200	3,432	1,146	339
개성공단 사업		232,141	482,819	157,873	40,404
남북 교역		146,734	304,179	95,817	26,155
항공기 우회 운항		2,310	-	-	-
합계		458,734	938,307	309,159	87,224

북한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	남북교역	우회운항	합계
2008	2,508	-	1,020	6,512	-	10,040
2009	5,015	1,300	1,928	22,471	-	30,715
2010	5,015	1,300	2,784	37,871	659	47,629
합계	12,538	2,600	5,733	66,854	659	88,384

(출처)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간 경제적 손실 분석(홍순직 박사, 현대경 제언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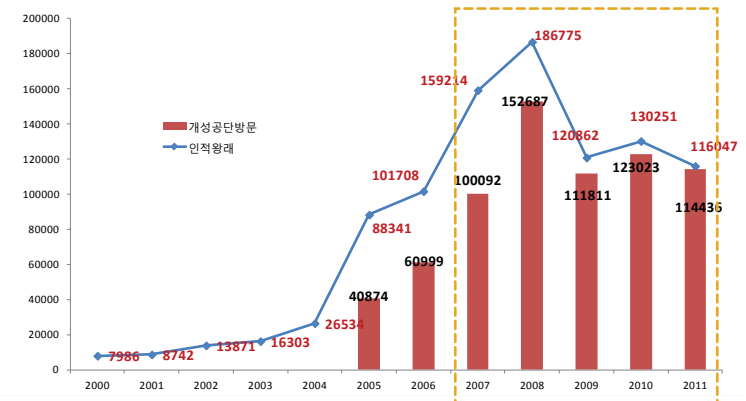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금강산/개성/평양 관광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0	1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금강산 관광	해로	213,009	57,879	84,727	38,306	449	-	-	-	-	-	-	394,370
	육로	-	-	-	36,028	267,971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381,664
	합계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234,446	345,006	199,966	-	-	1,776,034
개성 관광	-	-	-	-	-	1,484	-	7,427	103,122	-	-	-	112,033
평양 관광	-	-	-	1,019	-	1,280	-	-	-	-	-	-	2,299

2008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09년 큰폭으로 하락.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은 인적왕래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현 정부에서 인적왕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긴 어려워 보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객 제외

남북인적왕래(2010~2011)



멀어지는 남과 북

남북회담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대화가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회담은 모든 분야에 걸쳐 거의 성사되지 않는 실정임.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단에 대한 남측의 방북불허로 북과의 대화창구가 모두 막혀 남북관계가 북미회담에 전적으로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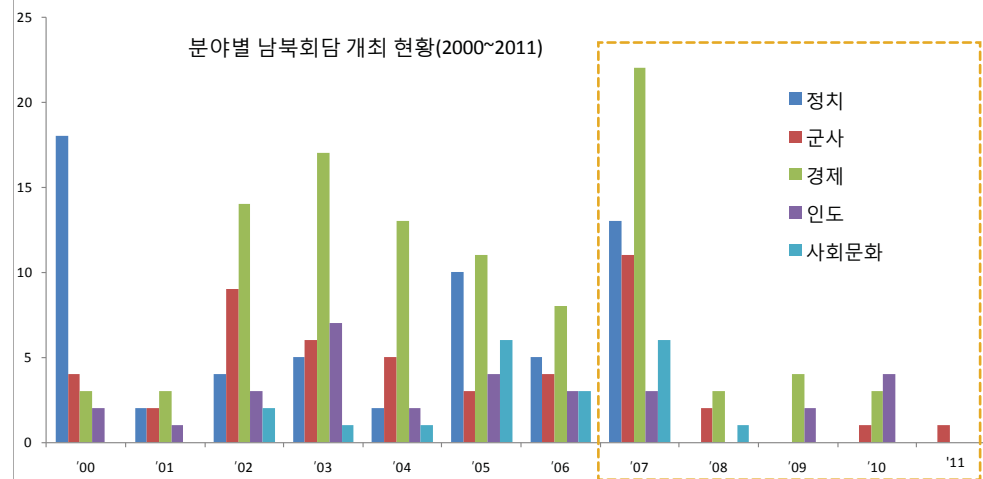
대북지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민간단체, 식량 차관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인도적대북지원 급감 시작. 5.24 조치가 시작된 2010년 이전부터 이미 대북지원은 크게 축소됨. 남북대결구도를 그려온 대북정책의 결과는 인도적지원에 큰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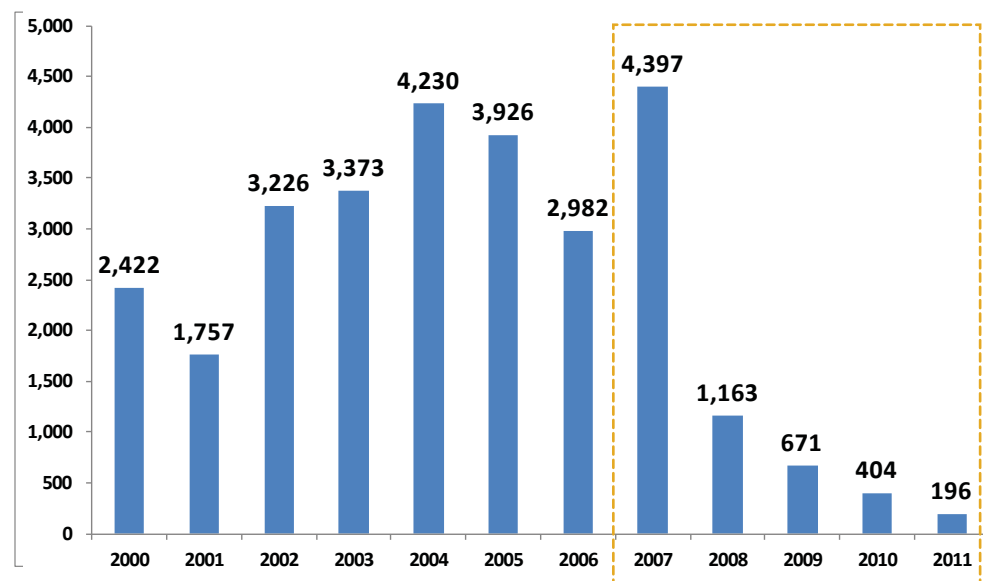
지난 3년간 당국차원의 대북지원 전무. 민간차원의 지원도 당국승인불허로 급격히 위축되어

2000년 보다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영유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부 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분야별 남북회담 개최 현황(2000~2011)



인도적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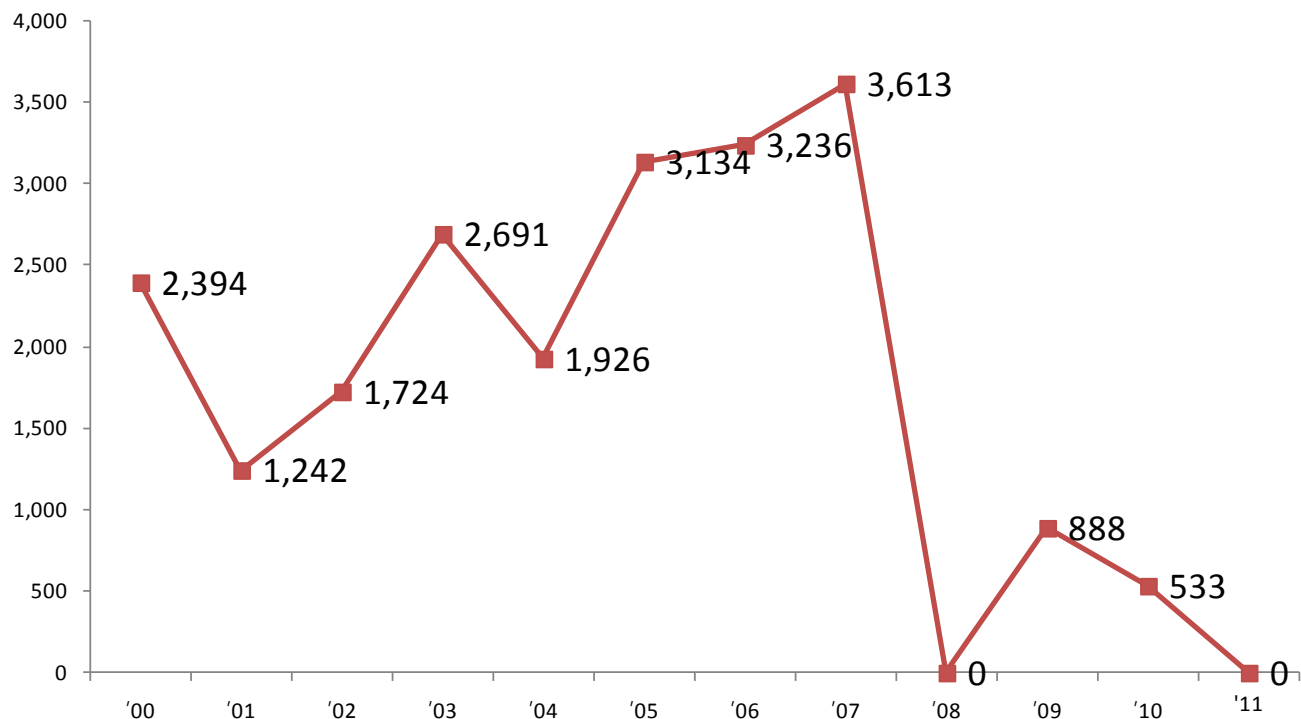


멈춰버린 만남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의 상봉의 경우
매년 2~3차례씩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9년과 2010년
단 두 차례 진행됨
상시적인 상봉을 위해 금강산에
건설한 이산가족면회소는
무용지물 되었음

이산가족 상봉 인원(2000~2011)



연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07	'08	'09	'10	'11	계
인원(명)	2,394	1,242	1,724	2,691	1,926	3,134	3,236	3,613	0	888	533	0	21,381

위기의 남북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외교적으로 바라본 한반도 평화지수

출처 : HRI

- HRI 한반도평화지수(HYUNDAI RESEARCH INSTITUTE PEACE INDEX)는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수.
- 2012년 2/4분기 기대지수는(24.1P) 2010년 3분기(30.1P) 이후 최저. 2012년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2010년 2분기 22.6P보다 낮을 전망.
-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었던 2010년도 보다 한반도의 정세는 더욱 불안. 이는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 강경대응 속에 이루어진 조문단 불허, 북의 광명성 발사실험의 영향.
- 2012년 2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긴장고조상태. 2009년 이후 한반도는 지속적으로 긴장고조상태에 속해있었음. 남과 북의 대결구도는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관계 범주	내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적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주민들이 바라본 서로에 대한 인식

출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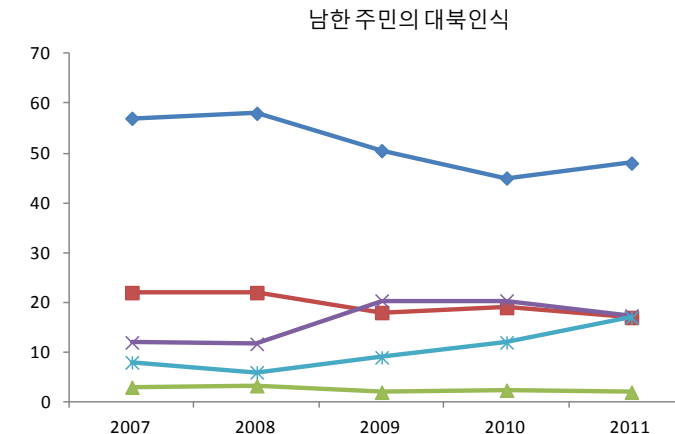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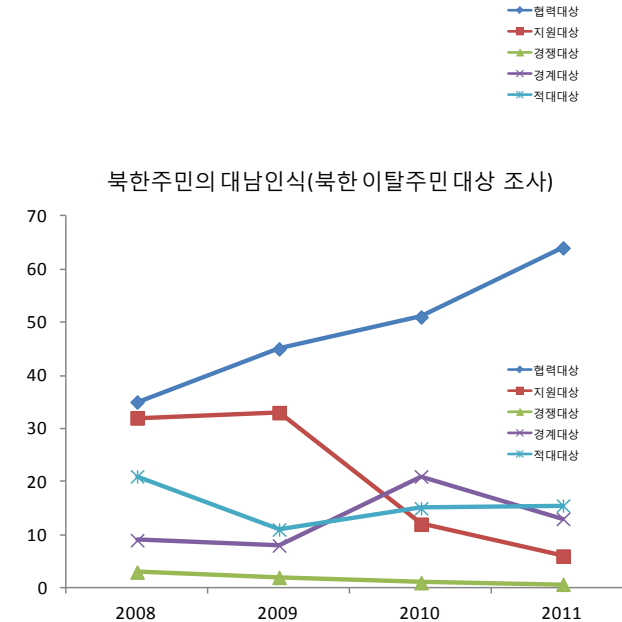
- 긴장 고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남과 북이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상생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천안함/연평도 이후 2010년 급격한 경계대상 인식 증가
- 2011년 적대대상의 경계대상 인식 역전.
- 협력대상인식 가파른 상승
- 계속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협력대상 인식

남한주민의 대북인식

-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협력대상 인식
- 2008년(5~6%) 적대대상 인식(17%)은 2011년 약 3배 증가함.
- 경쟁상대 인식은 점차 사라짐.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로 가는 길

북핵폐기는 이명박 정부와 같은 일방적 강요가 아닌, 다른 나라와의 협조를 통해 폐기가 가능한 상황을 유도해야함.

심리전 재개, 군비증강은 전쟁위험도를 오히려 상승시킴. 군사적 수단이 아닌 외교, 대화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함.

지속적인 정상회담, 대북지원, 교류는 적대감을 희석시키며 이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길을 발견해야함.

△ 북핵폐기

△ 정전협정폐기

△ 5.24조치폐기

△ 군사적 심리전 중단

△ 군비증강 중단

△ 대북 한미 군사합동작전 중단

△ 남북정상회담 재개

△ 대북지원 재개

△ 경제, 문화, 관광, 교류 재개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다시 만나야 합니다. 헤어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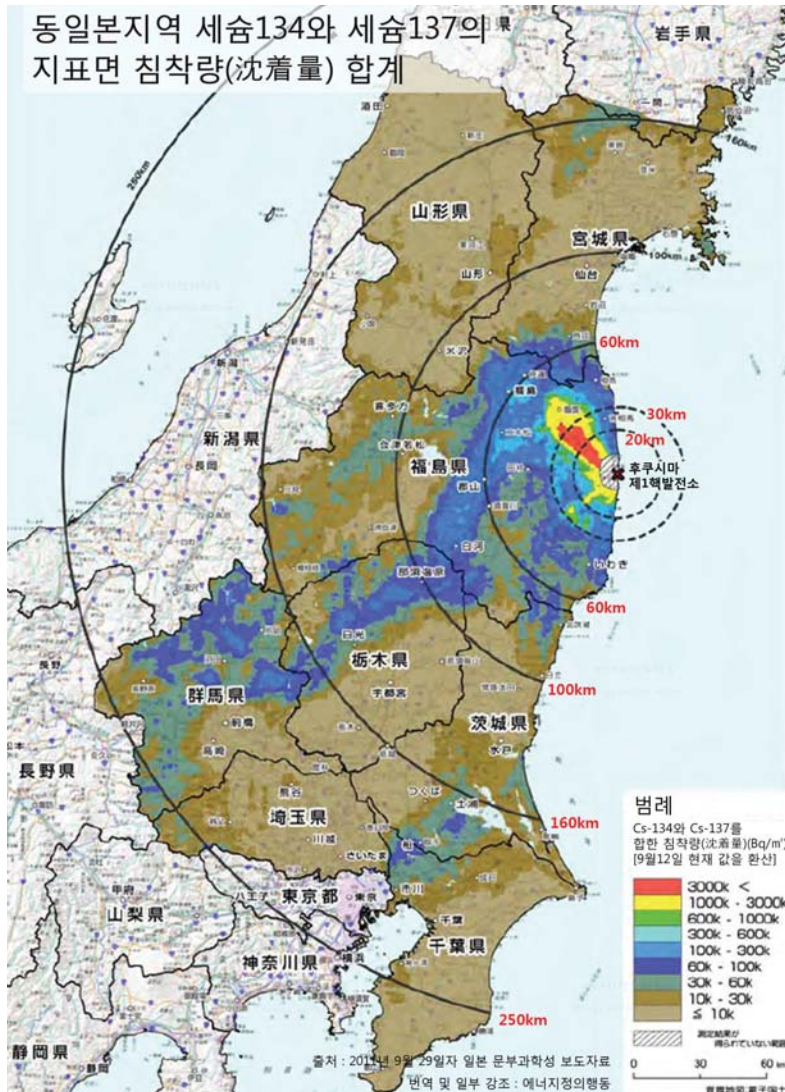
남과 북이 손을 잡기까지 한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놓아버린 손을 잡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다시 남과 북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 기업의 광고의 패러디처럼 남과 북이 이제는 서로 마주보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만남과 접촉은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311 재앙의 시작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대량의 방사능 유출



007등급

원자력 사고 등급중 가장 최악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168배

방사능 물질인 세슘, 히로시마 원폭의 168배 누출

100만명

후쿠시마 방사능재앙에 따른 향후 사망자 추정

331조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영국 인디펜던트지 2011-0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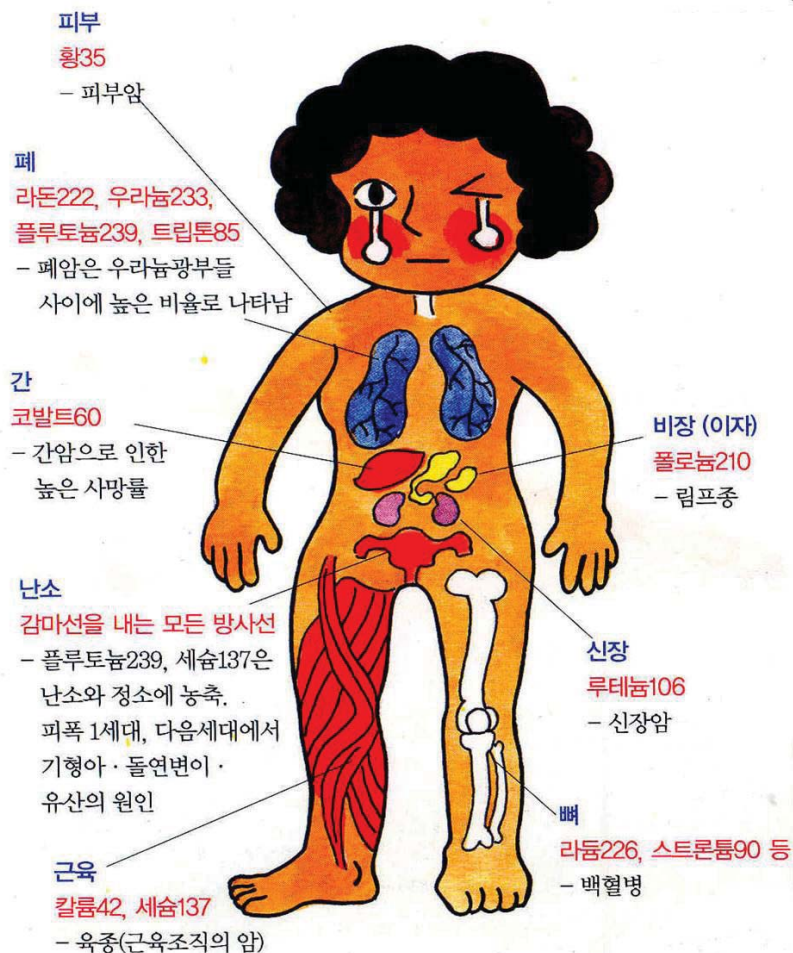
70%

일본 전 국토의 70%가 방사성물질 세슘137에 오염

미국 고다드 지구과학기술연구소, 일본 도쿄대,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공동 연구 2011-11

영원한 방사능 피해

토양오염 해양농축 ... 방사능 피해는 시작됐습니다



방사능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요오드(I-131) 8일

세슘(Cs-137) 30년

스트론튬(Sr-90) 28년

플루토늄(Pu-239) 24,400년

사고발생 25년 후에도 체르노빌 60km 바깥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유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 검출 - 2011년 3월 그린피스 조사단

후쿠시마에서 800km 떨어진 해역에서 한국
원양어선이 태평양에서 어획한 공치에서 세슘 0.91
Bq/kg 검출. - 8월 8일 주요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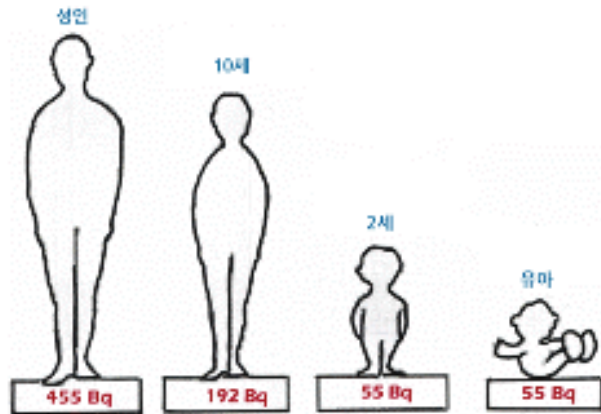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08.15 현재)		
	분석건수	검출건수	검출치 (Cs134 + Cs137)	분석건수	검출건수	검출치 (Cs134 + Cs137)
냉장 명태	816	6	1.0~3.5	581	29	0.5~4.5
냉동 고등어	26	1	6.1	39	37	2.4~7.2
냉장 대구	24	3		22	9	2.2~24.7
기타	2,673	2	1.3~3.0	2,064	6	2.8~6.8
합계	3,539	12	-	2,706	84	-

2011~2012, 8월 (단위 : 건, Bq/kg)

인체무해한 방사능 기준치는 없다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위험하며 유아, 어린이, 임산부에게 치명적



유아는 성인에 비해
약 **8배** 이상의
영향을 받는다



“모든 방사능 증가는 그만큼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2001 국립방사능방호위원회

“극미량의 방사능 증가도 암을 유발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핵규제위원회(NRC)

“모든 동물 실험 결과, 그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히로시마 등의 핵폭탄의 방사능이 인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방사능 양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인체 영향이 증가한다” 2006,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 반경 200_{km} 안에서 앞으로 10년간 20만명, 그 뒤 40년에 걸쳐 20만명 이상 암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2011, 유럽방사능리스크위원회(ECRR)

한국은 원자력발전 세계 최대 밀집국

언제까지 이 죽음의 레이스를 계속해야 하는가

건설 자원이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채가

늘어나는 중

해외 채권도 발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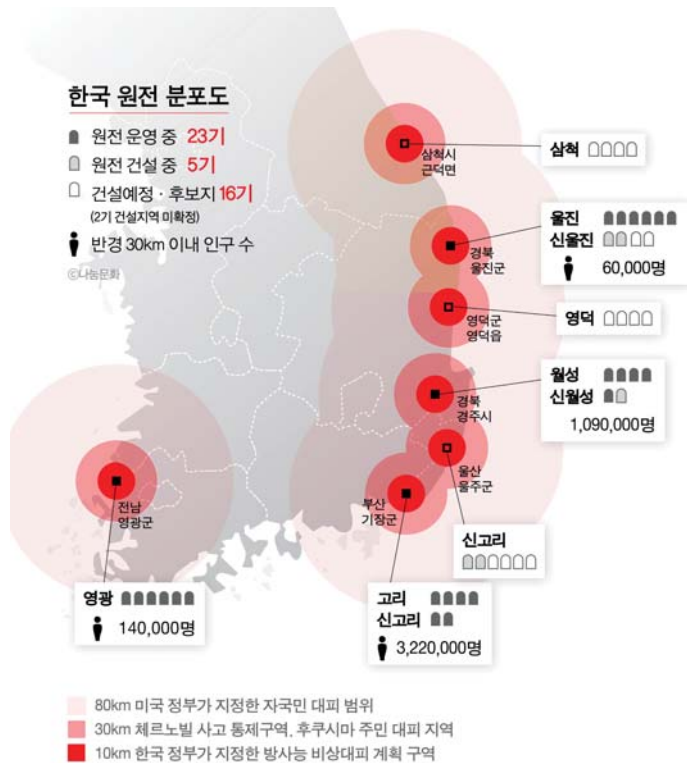
걱정스러운 세계 1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2개의 원전(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을 추가 가동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원전이 밀집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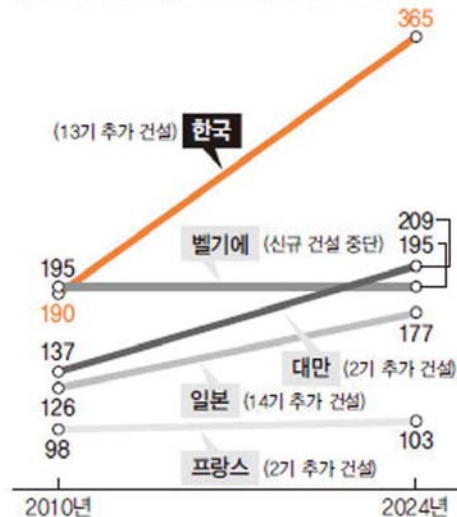
현재 23개의 원전이 빼곡하게 한국을 둘러싸고 있음

건설 중인 원전이 5개, 계획 중인 원전이 6개, 여기에 8개를 더 지을 수 있는 원전부지로 삼척과 영덕 선정



원전 밀집도 상위 5개국

※ 밀집도는 국토 면적 1km²당 원전 설비용량(kW)을 뜻함
자료: 세계원자력협회(WNA),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 중장기 재무 전망



골치덩어리 핵폐기물

쌓여가는 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대안은 없다 전 세계 어디에도 고준위핵폐기장은 없다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에서 사용을 마친 핵연료는 아주 높은 방사선과 열을 내뿜는 고준위핵폐기물로 변화된다. 이때 연료로 사용된 우라늄 외에 제논·스트론튬·세슘·플루토늄 등과 같은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새로 생기고 직접 사람에게 노출되면 치명적이다. 따라서 높은 열과 고준위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보통 저장수조 속에 30년 정도 보관해 열을 식혀 관리한 후 영구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어디에도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할 폐기장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재처리

원자력발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가공해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원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고속증식 원자로가 필요하다. 정부와 원자력계는 이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독성과 양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재활용할 수 있는 핵연료의 양은 전체의 1%내외에 불과하며, 독성이 크게 줄지 않는다. 또 해당 기술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만큼 발전해 있지 않다. 실제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재처리 공장과 고속증식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천문학적인 비용증가, 재처리과정에서의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등의 추출 문제도 재처리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보여준다.

고속증식로

현재의 원자로보다 고속의 핵분열반응을 일으켜 생산된 열과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로다. 고속증식로는 개발된 지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상업용으로는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기술적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상업용 고속증식로였던 프랑스의 페닉스 원자로로는 잦은 사고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일본의 몬주 고속증식로는 1995년에 가동에 들어갔지만 곧 냉각재로 쓰이는 나트륨이 누출되고 화재가 발생해 폐쇄되었다가 15년이 지난 2010년 5월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후에도 잦은 사고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경수로

현재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에서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노형이다. 핵분열의 반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감속재로 물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 연간 발생량

구분	연간 발생량
경수로형 원전(60만 kW급, 고리 1호기 등)	약 14톤
경수로형 원전(100만 kW급, 영광 3,4호기 등)	약 19톤
중수로형 원전(월성 1~4호기)	약 97톤

사용후핵연료 예상포화시점

	시설확충	저장가능연도
고리	신고리1,2호기 저장대 추가 고리1~4호기 → 신고리1~6호기 이송저장	2028
영광	영광2호기 저장대 교체 영광1~6호기 이송저장	2024
울진	울진1~6호기 → 신울진1~4호기 이송저장	2028
월성	건식저장시설 추가건설	2025

〈출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해도 핵폐기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재처리해도 줄어드는 핵폐기물의 양은 불과 1%

재처리 연료를 사용하는 고속증식로 건설비용은 경수로에 비해 최대 11배 이상

재처리비용이 직접처분 비용보다 2배 비싸다 (2011.11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험천만 고리1호기 폐쇄가 정답



1977년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가 가동됨. 제작 당시 계획대로라면, 30년 수명이 끝난 2007년 폐쇄해야 했지만, 2017년까지 수명을 10년 연장해 가동하고 있음.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발전(한수원)은 고리1호기의 오래되고, 문제가 되는 부품을 교체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함.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명연장한 원전의 가동이 사고를 더 키웠음. 노후한 원전은 폐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법임.

고리1호기도 지난 35년간 129회의 사고고장이 발생했고, 이는 전체 원전사고의 20%를 차지. 고리1호기의 핵심 부품인 압력용기가 오랫동안의 방사선을 쬌어 온도변화와 충격에 약해져 있음. 더구나 고리1호기가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에 불과. 고리1호기 멈춰도 전력대란은 없음.

“고리 원전 1호기 원자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상태인데 재료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해야 한다” - 일본의 원자로 전문가 동경대 이노 명예교수



고리원전 터지면

85만명 사망, 628조원 피해

고리1호기의 주요 안전성 문제

국내 원전사고고장의 20%가 고리1호기에서 발생(129회)

보고서 비공개, 편법으로 이루어진 수명연장(2017년까지 10년 연장)

170km의 배관, 1,700km의 전기선, 3만개의 밸브, 65,000여 곳의 용접부위 그 어디가 취약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

고리1호기의 최대충격흡수에너지 1999년 54.9J (기준치: 68J 이상)

원자로 압력용기가 급격한 온도변화에 파괴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취성전이 온도가 1999년에 이미 107.2℃까지 높아짐(일본 신형원자로 안전기준: 93℃ 이하)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추산

체르노빌 규모의 사고 발생시

고리원전 1호기 사고 시

50년간 암사망 85만명(급성사망 4만 8천명)

경제적 피해액 628조원(부산으로 바람 불 경우 - 2010년 GDP 53%)

영광원전 1호기 사고 시

50년간 암사망 55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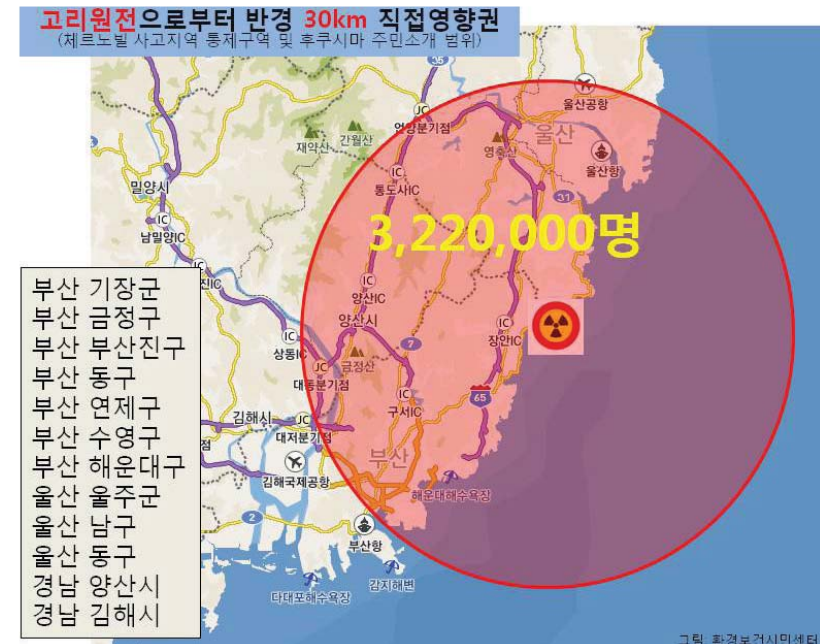
경제적 피해액 451조원(서울로 바람 불 경우)

한수원 가입한 보험 배상액: 500억원, 배상책임 약 5천억원 한정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가치와 피난비용만 경제적 산출

제염작업, 사고수습비용, 폐로비용, 폐기물비용 등 포함안함

〈출처〉 환경운동연합, 일본관서학원대학 박승준 교수 원전사고모의실험결과 (2012년)



원전사고가 1달 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유?

2012년 2월 고리1호기 전원공급 12분간 완전 상실사고 발생했으나 은폐
한 달이 지난 3월에서야 사고사실이 외부로 알려짐
자칫하면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몰랐다고 발뺌

“안전위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 원전납품 비리

31명 구속

뇌물액 22억 2천 700만원

중고부품 짝퉁부품

뇌물 입찰담합 비용부풀리기

골프채 고급리조트 향응제공

업무정보이용 주식투자 시세차익

...



경제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원자력

원자력 발전비용 > 태양광 발전비용

미국 듀크대 총장을 지낸 존 블랙번 교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이미 태양광 발전의 가격이 원자력 발전보다 저렴해졌다고 발표

지역주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원자력발전

2012년 1월 16일 경남 밀양 이치우 할아버지가 765만kw 초고압 송전탑 건설 항의 분신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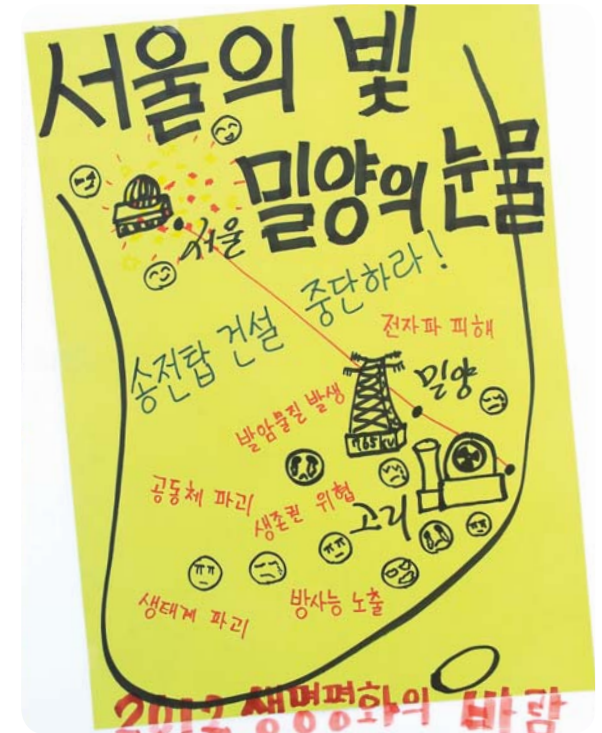
현재 밀양에는 신고리원전3호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도시로 실어 나르기 위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7년째 한전과 싸움 중

전체 전력의 11%를 사용하는 서울의 전력자립도는 불과 2%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음

“원전을 만든 사람들은 금방 죽어갈 것이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이 짐을 떠넘겨 받게 될 것이다”

_쓰지 신이치 교수 『슬로우라이프』, 『행복의 경제학』 저자



세계는 탈원전 선언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 정책의 변화

스위스 2034년까지 단계적 원전 폐기 결정

이탈리아 신규원전 도입 국민투표 94% 반대로 부결

베네수엘라, 필리핀, 태국 원전 포기 결정

독일 후쿠시마 직후 8기의 노후 원전 폐기, 2022년까지 원전폐기 결정

일본 54기 전체 원전 중 52기 가동 중지

한국 “후쿠시마 사고가 원자력 포기 이유가 될 수 없다. 원자력 발전은 불가피하다” 이명박대통령 9.22 유엔연설

2기(신월성 1호기 신고리 2호기)의 신규원전 추가 가동



고배 풀린 무기거래규제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거래규제가 답이다

12,000,000,000

매년 120억개의 총알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 인구의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세계 무기수출의 74%에 달하는 무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을 포함해 단 6개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 arms deliveries by value, to nearest whole percentage. Sourc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미국
35%

영국
7%

독일
7%

러시아
15%

프랑스
4%

중국
6%

인간
백만
정
5
총
8
지구상에 존재하는
총기의 수

자료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0가지 충격적 사실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필요한 이유(http://amnesty.or.kr/campaign_comment/5304/)

죽음의 거래?

무책임한 무기거래는 '죽음의 거래'다

2,600만명의 사람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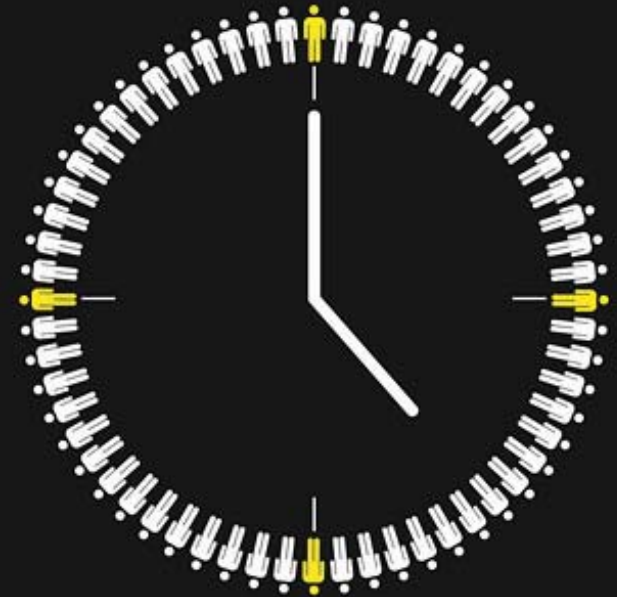
무력분쟁으로 인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60%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인권침해 사건의 60%는
소형무기의 사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력분쟁과 무장폭력으로 인해
1분마다 1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자료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0가지 충격적 사실들: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필요한 이유(http://amnesty.or.kr/campaign_comment/5304/)

우크라이나에서 시에라리온까지 무기는 어떻게 국경을 넘어 분쟁지역으로 흘러가는가



2012년, 무책임한 무기거래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을 말하는 것이다. 각국이 국제법과 모범적 기준을 따르는 한, 안보, 법집행,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 적법하게 무기를 판매하고 취득하고 보유할 국가의 권리는 무기거래조약 하에서 보호될 것이다.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대한 인권침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을 위협하는 무기 이전에 대한 명백한 금지조항 포함

모든 종류의 재래식무기와 거래의 종류를 규제대상으로 삼아야함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 되어야 함

작은 제국을 꿈꾸는 ‘불의한’ 파병국가

세계에 파병된 한국군

15개국 17개 지역 1,450명 12.09.01 기준, 출처 국방부

구 분				현재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50	티르	' 07. 7월	6개월	
		아이티 단위부대		240	레오간	'10. 2월		
	개인 단위	인·파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 94. 11월	1년	
		라이베리아 임무단(UNMIL)		2	몬로비아	' 03. 10월		
		남수단 임무단(UNMISS)		8	주바	' 11. 7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 09. 6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 07. 1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2	아비장	' 09. 7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운	' 09. 7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2		' 09. 11월		
소 계			621					
다국적군	부대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313		' 09. 3월	6개월	
		아프간 오쉬노부대		350	차리카	'10. 6월		
	개인단위	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3	마나마	' 08. 1월	1년	
			협조장교	2		지부티		' 09. 3월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3			' 03. 2월	6개월
			참모장교	1				
		아프간 치안전환사령부 (CSTC-A)		참모장교	4	카불	' 09. 6월	6개월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 01.11월	1년	
			참 모	1				
	소 계			679				
국방협력	부대단위	UAE 아크부대		150	알 아인	'11. 1월	6개월	
	소 계			150				
총 계				1,453				

한국군 파병의 역사

[1964년 베트남] ‘국악’의 이름과 맞바꾼 최초의 한국군 파병

한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해외 파병. 1964년부터 73년까지 연인원 한국군 32만 명이 참전했으며 사상자 2만 여명이 발생. 뿐만 아니라 파병된 한국군인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은 국제적인 잔혹행위로 기록되고 있음. 용병의 대가로 50억 달러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정당화되었음.

[2003년 이라크] 미국, 영국에 이은 세계 3번째 파병국이라는 오명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파병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한국정부는 2003년 4월 서희·제마 부대, 2004년 자이툰 부대를 추가파병하며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의 파병국이라는 오명을 남김.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중동-이슬람권에서 강대국의 편에서 약자에게 총을 겨누는 불의한 나라로 낙인 찍혔고, 2004년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피랍되어 목숨을 잃는 등 납치 살해의 구체적인 표적이 되기 시작함.

[2009년 PKO법 제정] 삼권 분립 훼손, 파병의 일상화 우려

2009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PKO 법안’은 ‘평화유지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1,000여명 규모의 상비부대를 창설해 국회 동의절차 없이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상시 파병법’임. 이 법은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의 사전동의권을 침해하고, 국제 분쟁에 대한 외교적 예방노력보다 군사적 개입을 손쉽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평화지향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

[2010년 아프가니스탄] 세계 유례없는 재파병

2007년 철군 이후 “다시는 파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전 세계 유례없는 재파병을 강행.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하는 지역재건팀(PRT)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오쉬노(Ashena) 부대를 파르완주 차리카르시로 파병. 정부는 지역재건팀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전투와 무관한 활동만 하게 된다고 선전. 그러나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기 어려운 아프간 상황에서 군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지역재건팀 역시 아프간 사람들에게는 점령군의 일부로 받아들여짐.

아프간 재건지원 위한 재파병?

2010년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아프간 지역재건팀(PRT)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오쉬노 Ashena' 부대(한국어로 '친구') 파병
총 461명이 NATO의 ISAF(국제안정화지원군) 지휘 아래 임무 수행
미군과 합동으로 기지방어, 반군 및 아프간 주민 통제 훈련 실시

아프간 PRT와 오쉬노 부대 구성

군인 350명 ISAF에 작전 통제돼 PRT 경비 및 한국 민간인력 호송·경호임무 수행

경찰 40명 PRT 내부치안 및 아프간 경찰훈련 수행

KOICA(국제협력단) 100명 파르완주 개발원조사업

'오쉬노' 부대 주요장비

한국군 사상 처음으로 헬기를 파병하는 등 첨단무기로 중무장

대당 10억 원에 지뢰방호장갑차량(MRAP) 10대를 미군으로부터 대여해 사용

UH-60 블랙호크 헬기, K-11차기복합소총, 음향저격수탐지기, 음향표적탐지장비, 주파수 교란장비 등

탈레반의 급조폭발물(IED)이나 매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무기와 장비 동원

평화재건을 위한 아프간 파병?

2010년 KOICA 아프간 지원예산 1,082억 원 중 854억원 부대건설 비용으로 사용

2011년 KOICA 아프간 지원예산 약 277.5억 원 중 PRT 예산 125.47억 원 (45.2%)

표적이 된 아프간 지역재건팀

아프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지역이었던 파르완주 위험도 계속적으로 증가

협로와 협곡이 많아 급조폭발물(IED) 공격에 취약

2010년 파르완주 PRT 활동의 대표 권한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양되는 날, PRT 주둔지 공사장 로켓 공격 받음

2011년 파르완주 경찰청장 폭탄테러로 사망, 주지사 관저 테러와 총격전 벌어져 25명 사망

한국 PRT, 2011년에만 13차례 외부공격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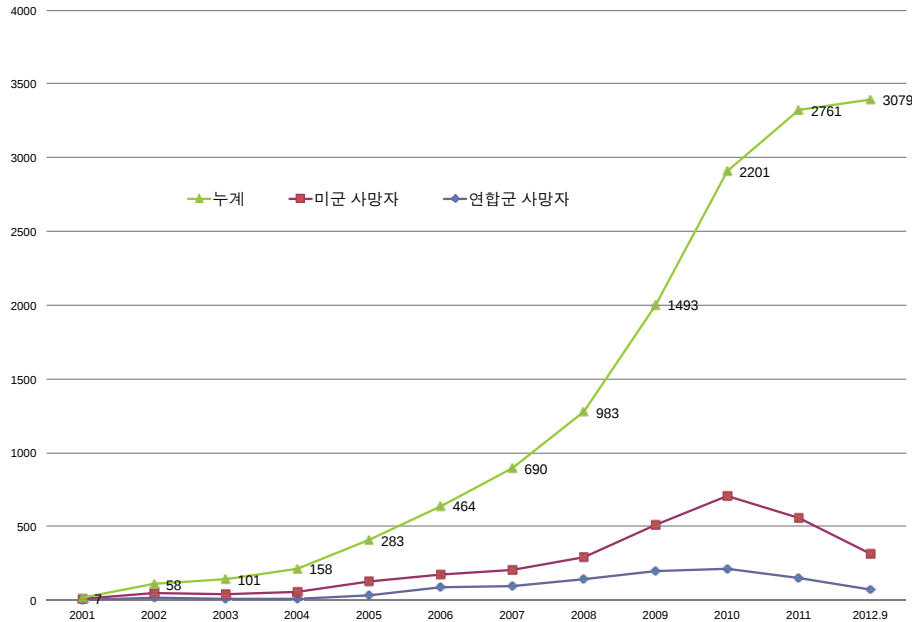
부대원과 주둔지 안전문제로 재건지원 활동 거의 수행하지 못함



11년의 전쟁, 11년의 점령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전쟁 군인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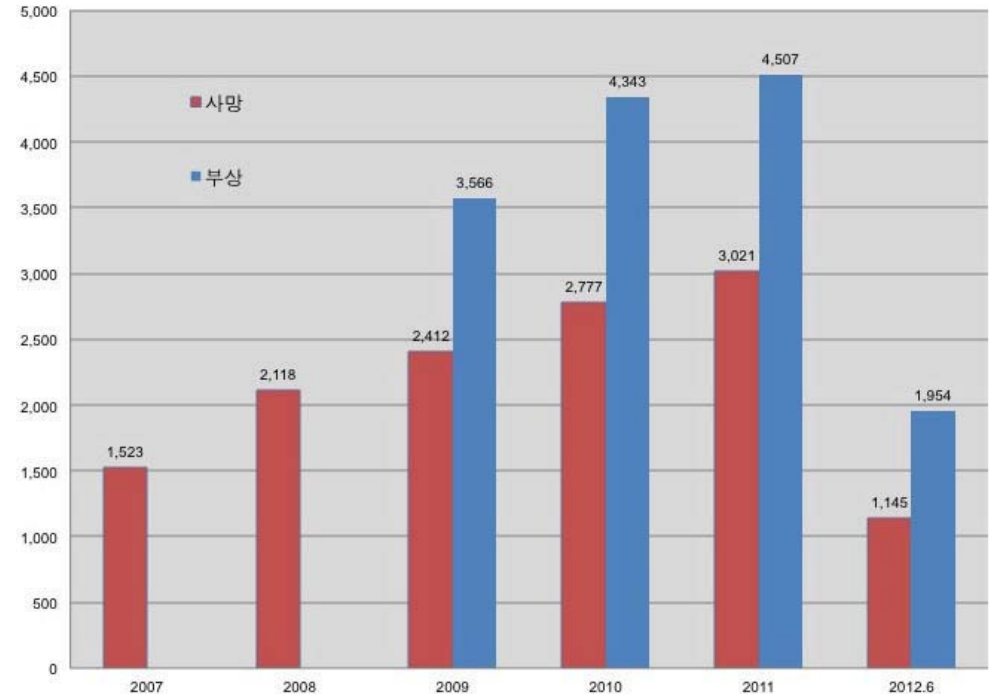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 (2012.9 기준)

- 아프간 파병군인 전체 사망자 수 3,079명
- 미군 2,024명 사망, 17,519명 부상
- 연합군 1,055명 사망
- 전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이내에 사망

갈수록 늘어나는 민간인 사망자

- 2007 ~ 2012년 총 13,000여 명 사망 / 2012년 상반기 1,145명 사망, 1,954명 부상



아프간 민간인 사망 및 부상자 수

〈출처〉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민간인 사망 원인 : 대부분 급조폭발물 공격, 자살폭탄 공격, 표적 살해, 미군의 공습이나 전투로 사망

그 어떤 것도 전쟁보다는 낫다

아프가니스탄 : 정치 취약 1위, 안전 취약 3위

이라크 : 정치 취약 2위, 안전 취약 1위

〈출처〉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 ODA의 분쟁 및 취약국 지원 방안〉 보고서 2010, 11

전쟁의 위선 > 전쟁비용 > 원조, 재건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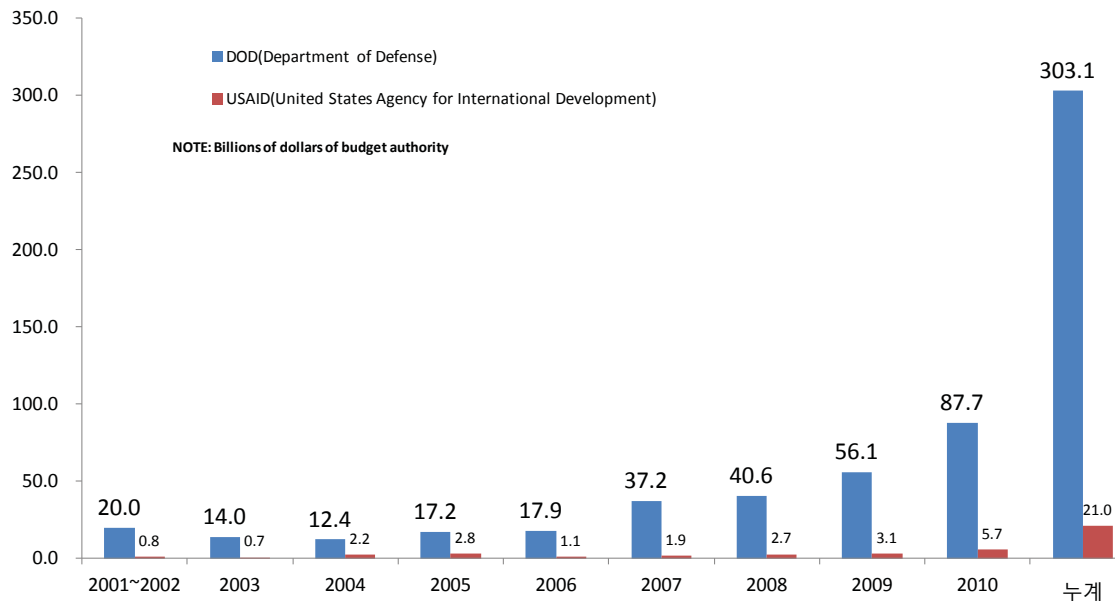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출구전략

- 한국의 파병비용과 인도적 지원 비용
- KOICA(무상원조) 최대 지원국가 (1991년~2011년)
- 1위 이라크 : 3억 달러 (3천175억원)
- 2위 아프간 : 2억 달러 (2천311억원)

2014년까지 남겠다고?

- 미국 2012년 여름까지 모두 33,000명을 철군할 계획, 2014년까지 완전 철군 예정
- 나토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군 예정
- 영국 2012년 5백 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완전 철군 예정
- 프랑스 2012년 말까지 주둔병력 모두 조기철군 결정
- 한국 2012년 철군 예정이었던 아프간 오쉬노 부대를 포함해 5개 부대의 파병 연장동의안 제출, 나토군과 함께 2014년까지 아프간에 남겠다는 계획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전쟁비용과 인도적 지원 비용



분쟁 국가의 원조, 원조의 군사화 : 한국군의 평화재건 활동의 실제

- 명분만 재건지원, 대부분 부대주둔 비용
- 이라크 경우, 자이툰 주둔비용 1/10에도 미치지 않는 재건비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자이툰 예산	1,807억원	1,609억원	1,394억원
재건지원예산	171억원	150억원	99억원
치안유지	87억원	73억원	19억원
친화활동	8억원	11억원	8억원
인도적 지원	4억원	14억원	10억원
사회경제개발지원	72억원	52억원	62억원

- 그나마 재건지원예산 50%는 치안유지 비용
- 재건지원사업으로 쿠르드 민병대 훈련(이라크 종파, 인종간 갈등 개입)
- 쿠르드 정보국 지원(소수종족 납치, 구금)
- 2010년 KOICA(무상원조) 아프간 지원예산 내역 / 2010년 외교통상부 자료

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재건지원단(PRT)지원	의료지원 및 직훈사업	18,944
	군부대시설건축	85,400
국내초청연수	150명	790
기타	KOICA 직원파견 경비 등	2,974
총계		108,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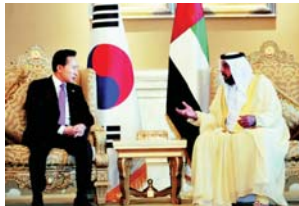
독재정권 지원하는 아랍에미리트 파병과 원전 수출

UAE 파병의 개요

파견규모 : 150명 이내

파견기간 : 2011. 1. 1~ 2012. 12. 31

파견예산 : 69억 6,800만원 (2012년)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한국군이 용병으로 전락

“용병 원전 수출 대가로 파견되는 한국군. 국군의 임무와 무관.
원전수출관련 계약 내용 일체 비공개.

UAE는 국회의원 절반은 임명되고 나머지 절반은 간접선거로 뽑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 사실상 UAE 군대양성은 독재정권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비분쟁 지역 파병의 선례 될 것. 국제평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 파병과는 무관함

UAE 정부 요청이라고 하면서 파견비용은 한국이 부담함

정부가 밝히는 UAE 파병의 목적과 임무

“국익창출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우리 특전부대 임무 수행 능력
향상 등”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
부대와의 연합훈련 등”

중동정세를 통해 본 UAE 문제점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UAE는 이웃한 이란과 영토분쟁으로 긴장상태에 있고,
대이란 추가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음 이란과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UAE에 주둔 중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중동지역에 대한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주둔하고 있음.

UAE는 최근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들여온 나라(한국과 더불어 3위, SIPRI 연감 보고서)

미국, 영국 등은 UAE를 테러위험국가로 분류. 국군과 국민의 안전 장담할 수 없음.

